대한민국 미래 유아교육 · 보육 체제개편을 위한 연속 토론회

1차 토론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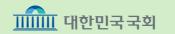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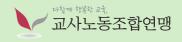
2021년 **9**월 **30**일 (목), 오후 3시~ 육아정책연구소 9층 대회의실

주최/주관

육아정책연구소, 교사노동조합연맹, 국회의원 강득구, 강민정, 김병욱, 김종민, 윤영덕 (가나다순) 국회의원 김민석(보건복지 위원장)







대한민국 미래 유아교육·보육체제개편을 위한 연속토론회

제1차 토론회

대한민국의 미래 유아교육·보육체제 이대로 괜찮은가?

주제: 대한민국의 미래 유아교육·보육체제 이대로 괜찮은가?

◎ 일시: 2021. 9. 30(목), 15:00 ~ 18:00

◎ 장소 : 육아정책연구소 대회의실

구분	시간	내용
개회	15:00~15:10 (10')	환영사 박상희 (육아정책연구소 소장) 개 회 김용서 (교사노동조합연맹 위원장), 국회의원 조해진 (교육위원장), 김민석 (보건복지위원장) 국회의원 강득구, 강민정, 권성동, 김병욱, 김종민, 윤영덕 (가나다순) 하윤수 (한국교총회장)
주제 발표	15:10~16:00 (50')	사 회 I 김근진 (육아정책연구소 부모교육연구팀장) 주제발제 I 01 발제 미래 유아교육, 보육 체제 개편을 위한 제언: 유아무상·의무교육, 유보통합을 중심으로 박창현 (육아정책연구소 미래교육연구팀장) 02 발제 우리가 원하는 미래 유아학교 윤지혜 (전국국공립유치원교사노조 위원장)
지정 토론	16:00~17:20 (80')	좌 장 박창현 (육아정책연구소 미래교육연구팀장)
자유 토론	17:20~18:00 (40′)	질의응답, 추가토론

대한민국 미래 유아교육·보육 체제개편을 위한 연속 토론회

1차 토론회

대한민국의 미래 유아교육 보육 체제 이대로 괜찮은가?

2021년 9월 30일 (목), 오후 3시~ 육아정책연구소 대회의실

육아정책연구소_KICCE, 교사노조연맹 TV, 강득구 TV ► 유튜브생중계



대한민국의 미래 유아교육·보육 체제 이대로 괜찮은가?

육아정책연구소, 교사노동조합연맹, 국회의원 강득구, 강민정, 김병욱, 김종민, 윤영덕 (가나다순) 국회의원 김민석(보건복지 위원장)

후원/연대 교사노동조합연맹, 교육의 봄,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아이들이 행복한 세상, 용인교육시민포럼, 장애영유아보육교육정상화를 위한 추진연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국공립유치원교사노동조합, 전국특수교사노동조합,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경기지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 한국유아교육행정협의회, (사)한국사립유치원협의회, (사)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사)행복한 미래교육포럼 등 (가나다순)

진행순서	구분	시간	세부내용
	개회	15:00~15:10 (10')	□ 활명사: 박상희 (육아정책연구소 소장) □ 축 사: 김용서(교사노동조합연맹 위원장), 국회의원 조해진(교육위원장), 김민석(보건복지위원장) 국회의원 강득구, 강민정, 권성동, 김병욱, 김종민, 윤영덕 (가나다순) 하윤수(한국교총회장)
	주제발표	15:10-16:00 (50')	□ 사 회: 김근진(육아정책연구소 부모교육연구팀장) □ 주제발제 01 발제 미래 유아교육, 보육 체제 개편을 위한 제언: 유아무상·의무교육, 유보통합을 중심으로 박창현 (육아정책연구소 미래교육연구팀장) 02 발제 우리가 원하는 미래 유아학교 윤지혜 (전국국공립유치원교사노조 위원장)
	지정토론	16:00-17:20 (80')	□ 좌장: 박창현 (육아정책연구소 미래교육연구팀장) 조형숙 (중앙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김은희 (대유(공영형) 유치원 원장) 긴오경 (자연이랑 어린이집 원장) 임미령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영유아정책자문위원회 위원장) 우영혜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 회장) 이중규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회장) 박영란 (한국사립유치원협의회 공동대표) 이혜연 (전국 장애영유아부모회 고문)
	자유토론	17:20-18:00 (40')	질의응답, 추가토론

※ 사전등록 후 자료집 다운 가능, 사전등록 링크 추후 배포

대한민국 미래 유아교육 · 보육 체제개편을 위한 연속 토론회

대한민국의 미래 유아교육 보육 체제 1차 토론회

이대로 괜찮은가?

2021년 9월 30일 (목), 오후 3시~ 육아정책연구소 대회의실

육아정책연구소_KICCE, 교사노조연맹 TV, 강득구 TV < ▶ 유튜브생중계





01 발 제

미래 유아교육, 보육 체제 개편을 위한 제언: 유아무상 · 의무교육, 유보통합을 중심으로

박창현 (육아정책연구소 미래교육연구팀장)

우리가 원하는 미래 유아학교

윤지혜 (전국국공립유치원교사노조 위원장)

조형숙 (중앙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김오경 (자연이랑 어린이집 원장) 우영혜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 회장) 박영란 (한국사립유치원협의회 공동대표)

사 회 김근진 (육아정책연구소 부모교육연구팀장)

김은희 (대유(공영형) 유치원 원장)

임미령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영유아정책자문위원회 위원장)

이중규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회장)

이혜연 (전국 장애영유아부모회 고문)

▶ 1차: 대한민국의 미래 유아교육·보육 체제 이대로 괜찮은가? ◀

2차: 유아교육 • 보육의 미래, 20대 대통령에게 바란다!

3차: 국가교육회의 유아교육의제

- 미래 유아교육의 방향과 실행, 전달체계를 위한 제언

4차: 미래교육을 위한 학급당 유아수와 교원 정원

5차: 미래 유아학교 교육과정의 방향은?

6차: 미래 유아특수교육의 방향과 과제

주최/주관

육아정책연구소, 교사노동조합연맹, 국회의원 강득구, 강민정, 김병욱, 김종민, 윤영덕 (가나다순) 국회의원 김민석(보건복지위원장)

교사노동조합연맹, 교육의 봄,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아이들이 행복한 세상, 용인교육시민포럼, 장애영유아보육교육정상화를 위한 추진연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국공립유치원교사노동조합, 전국특수교사노동조합,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경기지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 한국유아교육행정협의회, (사)한국사립유치원협의회, (사)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사)행복한 미래교육포럼 등 (가나다순)

CONTENTS

환 영 사	박상희(육아정책연구소 소장)	
축사	김용서 (교사노동조합연맹 위원장), 국회의원 조해진 (교육위원장), 김민석 (보건복지위원장) 국회의원 강득구, 강민정, 권성동, 김병욱, 김종민, 윤영덕 (가나다순) 하윤수 (한국교총회장)	
주제발표		
● 01 발제 🛮 미래	유아교육, 보육 체제 개편을 위한 제언:	
유아무	구상·의무교육, 유보통합을 중심으로 ⋯⋯⋯⋯⋯⋯ 1	5
/ 박칭	현(육아정책연구소 미래교육연구팀장)	
	가 원하는 미래 유아학교 ·······3 혜(전국국공립유치원교사노조 위원장)	3
지정토론		
조형숙 ₁ 중앙대학	교 유아교육과 교수4	.3
김은희 । 대유(공영	명형) 유치원 원장·······4	5
김오경 1 자연이랑	어린이집 원장5	0
임미령 1 사교육걱	정없는세상 영유아정책자문위원회 위원장5	4
우영혜 । 한국국공	립유치원교원연합회 회장6	0
이중규 1 한국어린	이집총연합회 회장6	3
박영란 1 한국사립	유치원협의회 공동대표6	6
이혜연 1 전국 장(애영유아부모회 고문7	0

대한민국 미래 유아교육·보육 체제개편을 위한 연속 토론회 대한민국의 미래 유아교육·보육 체제 이대로 괜찮은가?

안녕하십니까?

육아정책연구소장 박상희입니다.

대한민국 미래 유아교육·보육 체제개편을 위한 연속 토론회 중, 1차 토론회인 〈대한민국의 미래 유아교육·보육 체제 이대로 괜찮은가?〉를 육아 정책연구소와 교사노조연맹, 그리고 존경하는 여야 의원님들과 함께 개최하게 되어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바쁜 와중에도 미래 유아교육·보육 체제의 변화와 대한민국의 미래세대를 이끌어 나갈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생각하며, 최근 유아교육 분야에서 가장 주요한 쟁점이 되는 주제들을 중심으로 연속토론회의 형식으로 논의의 장을 마련해 주신 박창현 미래교육연구팀장님과 교사노조연맹의 여러 선생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발제를 맡아주신 윤지혜 전국국공립유치원노조 위원장님, 토론을 맡아주신 조형숙 중앙 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님, 김은희 대유 유치원 원장님, 김오경 자연이랑 어린이집 원장님, 임미령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영유아정책자문위원회 위원장님, 우영혜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 회장님, 이중규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회장님, 박영란 한국사립유치원협의회 공동대표님, 이혜연 전국 장애 영유아부모회 고문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유아의무교육과 무상교육 및 보육 제도는 정치적 관심을 수용하면서도 최종적으로 영유아에게 최선의 이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며, 국가의 인재양성과 부모의 돌봄 걱정을 모두 해소하기 위한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또한 교육과 보육계, 여성 및 부모단체 등 각각의 입장에서 해석이 다른 해당 주제의 쟁점과 과제를 살펴보고, 최선의 해결방안과 장기 과제를 체계적으로 도출해낼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특정 제도 안착을 전제하기보다 다양한 쟁점들을 논의하고 방안을 제안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이 토론회가 최근 유아교육과 보육계 주요 현안인 유아무상, 의무교육이 얼마나 어떻게 가능한지와 유보통합에 대한 이슈들을 논의해보는 귀중한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또한 미래 유아학교의 모습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듣고 함께 이야기하는 의미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실시간 유튜브로 참여해주시는 국민여러분들의 활발한 의견 개진을 통해 더 나은 정책 방안이 도출되기를 희망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사노동조합연맹 위원장 김용서입니다

먼저, 유아들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위해 현장에서 고군분투하며 헌신하고 계실 유치원 선생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바쁘신 와중에도 대한민국 유아교육의 발전을 위해 한마음 한뜻으로 이자리에 함께하신 국회의원 강득구 의원님, 강민정 의원님, 권성동 의원님, 김민석 의원님, 김병욱 의원님, 김종민 의원님, 윤영덕 의원님과 육아 정책연구소, 토론자 여러분, 그리고 오늘 이 토론회를 시청하고 계실 많은 선생님들과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토론회는 우리나라의 유아교육·보육 체제가 발전해 나가야 할 미래 유아학교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는 매우 중요한 시발점이 될 것입니다. 오래전부터 풀지 못한 갈등은 잠시 접어두고 대한 민국의 모든 유아들이 평등하게 양질의 교육적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고민 하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교사노조연맹은 현장 유치원교사들을 주축으로 유아교육 정상화를 위해 끊임없이 정책을 제안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유치원을 유아학교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유아교육법에도 명시되어 있듯이 유치원은 학교입니다. 따라서 학교로서의 정체성과 공공성, 그에 따른 책무성을 강화하도록 반드시 유아학교로 명칭이 변경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꿈꾸는 미래 유아교육체제는 국가가 책임지고 교육의 질과 공공성을 보장하여 유아, 교사, 학부모, 교육의 주체 모두가 만족하는 유아학교 체제일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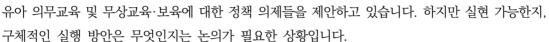
교사노조연맹은 오늘을 시작으로 6회에 걸쳐 진행되는 연속 토론회에서 유아교육의 현안과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데 적극적으로 동참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유아교육 발전과 미래의 주역인 유아 들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위해 발전적인 방향으로 유아학교 체제의 그림을 그려나가는데 교사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며 함께 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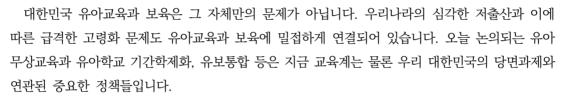
안녕하십니까?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밀양·의령·함안·창녕 국회의원 조해진입니다.

대한민국 미래 유아교육·보육 체제개편을 위한 연속 토론회 중, 1차 토론회인 〈대한민국의 미래 유아교육·보육 체제 이대로 괜찮은가?〉가 개최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최근 미래 교육체제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면서, 유아 교육과 보육 분야의 공공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응하여 정치권에서는





무엇보다도 경제적, 정치적 논리가 아니라, 최종적으로 영유아에게 최선의 이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저출생과 돌봄의 문제도 동시에 해결하는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할 것입니다. 오늘 토론회가 다양한 의견을 함께 고민하고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는 귀중한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토론회를 제안해주신 육아정책연구소 박상희 소장님, 발제를 맡아주신 박창현 육아정책연구소 미래교육연구팀장님, 윤지혜 전국국공립유치원노조 위원장님, 토론을 맡아주신 조형숙 중앙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님, 김은희 대유 유치원 원장님, 김오경 자연이랑 어린이집 원장님, 임미령사교육걱정없는세상 영유아정책자문위원회 위원장님, 우영혜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 회장님, 이중규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회장님, 박영란 한국사립유치원협의회 공동대표님, 이혜연 전국 장애영유아부모회 고문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토론회를 통해 의미 있는 방안이 모색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김민석입니다.

대한민국 미래 유아교육·보육 체제 개편을 위한 연속 토론회 중, 1차 토론회인〈대한민국의 미래 유아교육·보육 체제 이대로 괜찮은가?〉를 육아 정책연구소와 교사노조연맹, 그리고 여러 의원님과 함께 개최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발제를 맡아주신 박창연 육아정책연구소 미래교육연구팀장님, 윤지혜 전국국공립유치원노조 위원장님, 토론을 맡아주신 조형숙 중앙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님, 김은희 대유 유치원 원장님, 김오경 자연이랑 어린이집 원장님. 임미령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영유아정책 자문위원회 위원장님, 우영혜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 회장님, 이혜연 전국 장애영유아부모회고무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미래세대를 고려한 유·보 체제 개편과 유치원의 공공성 정책의 후속 조치의 일환을로 유아의무교육 및 무상교육·보육 정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전반의 변화와 내년도 정치권의 지각변동을 앞두고 국가가 책임지는 교육 및 돌봄 체계 구축에 정책입안자들의 관심이 높은 상황입니다.

유아의무교육과 무상교육 및 보육 제도에 대한 정치적 관심을 수용하면서도 최종적으로 영유아에게 최선의 이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며, 국가의 인재양성과 부모의 돌봄 걱정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정치권에서는 대선을 앞두고 여러 정책을 제안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가능한지, 구체적인 과제는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의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오늘 토론회에서 최근 유아교육과 보육계에서 이슈가 되는 유아무상,의무교육 유보통합에 대한 이슈들을 함께 논의하고, 다양한 의견을 함께 고민하는 과정을 통해 새로운 이슈를 논의하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토론회에 함께해주신 여러분들의 활발한 의견개진을 통해 실효성 있는 방안이 모색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안양 만안구 출신 국회의원 강득구입니다.

오늘 우리는 대한민국의 미래인 유아들의 교육·보육 체제 개편을 위해 모였습니다. 각계각층의 교육전문가들이 지혜를 한데 모으는 토론회를 함께 주최하게 되어서 뜻깊게 생각합니다. 토론회를 주관해주신 육아정책 연구소, 교사노동조합연맹을 비롯하여 강민정, 권성동, 김민석, 김병욱, 김종민, 윤영덕 의원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초등학교 1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 9년 동안 무상의무교육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정부는 2021년 올해 고등학생 전 학년 무상교육을 전면 실시했습니다. 2018년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위해 노력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한 걸음씩 유·초·중·고·특수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달성하기 위해 전진해왔습니다.

그 가운데 유아교육과 보육은 공교육 진입의 시작점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 시민들과 학부모님들은 유아교육·보육의 공공성 확보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학령인구감소, 저출생으로 인한 인구절벽 등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조차도 소멸 위기에 빠뜨리는 위기 상황도심각합니다. 이에 대응하는 체계를 구축할 뿐만 아니라 다가오는 미래교육 체제에 걸 맞는 대전환도필요합니다. 지금은 미루고 미뤄온 유보통합에 대해서도 실질적이고도 담대한 추진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오늘 토론회는 총 여섯 차례에 걸쳐 연속으로 하는 토론회 중 1차에 해당하는 첫걸음입니다. 앞으로 다섯 번의 발걸음에 다섯 배 이상의 더 큰 기대를 해주시고, 그 첫걸음에 소중한 마음을 모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토론회가 학생·학부모의 교육 부담을 덜어내는 것은 물론 교육격차에 따른 사회적 격차를 해소하고, 소외되는 아이들이 보이지 않도록 차별 없는 교육의 장을 제공하기 위한 소중한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토론회를 통해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의 활발한 의견 개진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저 역시,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으로서 토론회에서 논의되는 다양한 정책제안을 바탕으로 제도 개선은 물론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착실히 이어가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열린민주당 국회의원 강민정입니다.

오늘 대한민국 미래 유아교육·보육 체제개편을 위한 연속 토론회 "대한 민국의 미래 유아교육·보육 체제 이대로 괜찮은가?" 개최를 진심으로 환영 합니다. 이 자리를 만들어주신 육아정책연구소, 교사노동조합연맹 및 선배 동료 의원님 그리고 바쁘신 와중에도 귀한 시간 내어 토론회 사회, 발제, 토론을 맡아주신 모든 분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우리나라 인구구조의 변화는 고령화와 저출생으로 대표될 수 있습니다. 2005년에는 출생아 수 43.9만명, 합계출산율 1.09명, 고령화율 9.3%였으나, 2020년에는 출생아수 27.2만명, 합계출산율 0.84명, 고령화율 15.7%로 더욱 심화되었습니다. 작년에 이르러는 사망자(30.5만명)가 출생아(27.2만명)보다 많아 마침내 인구의 자연감소가 시작되었습니다.

현행 유아교육법 제24조에 초등학교 취학 직전 3년의 유아교육은 무상으로 실시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교육비 이외의 많은 비용을 학부모가 부담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유치원이나 어린이집마다 운영되는 프로그램의 수와 질이 천차만별이라 결국은 유아들이 받을 수 있는 교육의 기회도 달라지게 됩니다. 이러한 불평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표준유아 교육비를 재산정하고, 단계적인 무상교육을 통해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빈곤으로 인한 불평등에서 아동 빈곤은 그 결과에 자신의 노력 여부가 반영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성인의 빈곤과는 다르기 때문입니다. 또 아동기에 경험한 빈곤은 이후의 학업성취도와 건강 상태뿐만 아니라 생애 전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아이도 출발단계에서부터 뒤처지지 않도록, 지역과 가정환경에 상관없이 모두 질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교육 개시 연령 조기화가 세계적 추세인 가운데 우리도 유아 교육과 초등학교 교육을 잘 연결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서로 전문적인 논의가 필요합니다.

우리 아이들의 미래는 곧 대한민국의 미래이기도 합니다. 그동안 "미래 유아교육·보육"에 대한 주제는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발전적인 유아교육·보육체계를 구축하는 길은 지난한 과정이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더 철저하게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고민하고 자기중심 관점에서 벗어나야 할 땝니다. 오로지 아이들만 생각하고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오늘 이 토론회가 바로 이러한 성찰적 과정의 출발점이 되길 바랍니다. 저 역시 여러 선생님들 께서 건네주신 경험과 의견들을 귀담아듣고 고민하며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수고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민의 힘 강릉 출신 국회의원 권성동입니다.

위드 코로나 19로의 갈림길에서 미래 유아교육·보육 체제개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내년 대선을 앞둔 만큼 미래세대를 위한 국가가 책임지는 유아교육과 보육에 관한 새로운 구상이 세워져야 합니다. 부모들의 돌봄 걱정 해소와 저출생 문제를 모두 해소하는 다각적 접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대한민국 미래 유아교육·보육 체제개편을 위한 첫 토론회를 육아정책연구소, 교사노조연맹, 그리고 존경하는 여러 의원님들, 그리고 국민 여러분들과 함께 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6차례 이어질 토론회 주제를 살펴보니, 대한민국의 미래세대인 영유아를 중심으로 고민한 내용들로 알차게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보여 큰 기대가 되는 바입니다.

토론회를 주관하고 준비해주신 육아정책연구소 박상희 소장님과, 교사노조연맹 위원장님께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또한 발제를 맡아주신 박창현 육아정책연구소 미래교육연구팀장님, 윤지혜 전국 국공립유치원노조 위원장님, 토론을 진행해주실 조형숙 중앙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님, 김은희 대유 유치원 원장님, 김오경 자연이랑 어린이집 원장님, 임미령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영유아정책 자문위원회 위원장님, 우영혜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 회장님, 이중규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회장님, 박영란 한국사립유치원협의회 공동대표님, 이혜연 전국 장애영유아부모회 고문님을 비롯한관계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토론회에서 무상교육 및 보육, 나아가 유아학교, 유아교육의 기간학제화에 대한 논의들이 최종적으로 아이들의 권리에 대한 기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의 미래세대인 아이들이 자신의 꿈을 마음 껏 펼칠 수 있는 초석을 마련해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활발한 의견 개진을 통해 현장 중심의 실천적인 방안들이 다양하게 논의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포항시남구울릉군 국회의원 김병욱입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대한민국의 미래 유아교육·보육체제개편을 위한 연속 토론회〉에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토론회를 함께 준비해주신 강득구, 강민정, 권성동, 윤영덕 의원님을 비롯한 육아정책연구소와 교사노동조합연맹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무엇보다 쉽지 않은 여건 속에서도 사명감을 가지고 유아교육 발전의 최전방에서 노력을 아끼지 않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교사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국가는 국민에게 여러 가지 방식으로 생애주기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영유아시기가 가장 중요하다는 점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영·유아기는 개인의 인지·정서·사회영역 등 기초능력이 집중 형성되는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유아의 교육과 보육은 우리 사회 모두의 책임입니다. 그러나 이를 지원하고 보완하는 사회 시스템이 미비한 나머지, 우리나라 일하는 여성이 출산 후 직업을 포기하는 비율이 49.8%에 이른 다고 합니다. 더군다나 코로나로 인해 맞벌이 부부의 77%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육아공백 사태에 직면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부모들은 더더욱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의지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우리 선생님들은 시간연장, 24시 보육, 휴일보육, 특수보육 등 장시간의 고강도 보육과 교육에 많이 지쳐가고 있습니다.

이제 어떻게 우리 아이들을 교육하고 돌볼지 심도깊게 고민하고 적극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정부 또한 그동안 멈춰왔던 논의를 재개하고 양질의 교육·보육 서비스를 위한 거시적 방향을 제시 해야 할 것입니다. 전체적인 교육·보육체계 개선을 위해서는 재정지원도 또한 강화되어야 할 것입 니다.

특히 4차 토론회 주제인'미래교육을 위한 학급당 유아 수'는 선생님들의 근로 어려움을 해결할 뿐만 아니라 더 나은 아이들의 교육환경을 위해 꼭 논의가 필요한 문제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저도 유치원 학급당 적정 학생 수 유지계획을 수립하는 「유아교육법 개정법률안」을 발의할 예정입니다.

유아교육이 국가의 책임인 만큼 교육과 보육의 공공성 확보와 무상교육·보육도 더 활발히 논의되어야 합니다. 2012년 누리과정이 도입되며 이원화되어 있던 유치원 교육과정과 어린이집 보육과정이 통합되는 첫 걸음을 딛었습니다. 또한 누리과정 재원조달 문제 해결을 위해 2016년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이 제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논의의 우선순위에서 밀리면서 몇 년째 제자리인듯하여 아쉬움이 큽니다.

아무쪼록 오늘을 비롯해 6차까지 이어지는 연속 토론회가 아이와 부모, 선생님들이 바라는 유아 교육·보육 체재 실현의 마중물이 되길 바랍니다.

토론회에 참석해주신 여러 전문가분들의 다양한 의견 개진을 부탁드리며, 저 역시 향후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늘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충남 논산계룡금산 국회의원 김종민입니다.

코로나 19 확산에 따른 사회 전반의 패러다임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내년도 대선을 앞두고 국회에서는 국가가 책임져야 하는 교육과 보육 정책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미래세대를 고려한 유·보 체제개편과 유치원의 공공성 정책의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유아 의무교육 및 무상 교육·보육 정책에 대한 필요성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게 논의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미래 유아교육·보육 체제 개편을 위한 연속 토론회 중, 1차 토론회인 〈대한민국의 미래 유아교육·보육 체제 이대로 괜찮은가?〉를 육아정책연구소와 교사노조연맹, 그리고 여러 국회의원 님들과 함께 개최할 수 있어 매우 뜻깊은 자리로 생각됩니다. 향후 개최될 연속 토론회도 현장의 목소리를 잘 반영할 수 있는 하나의 플랫폼으로 작용하기를 기대합니다.

발제를 맡아주신 박창현 육아정책연구소 미래교육연구팀장님, 윤지혜 전국국공립유치원노조 위원장님, 토론을 맡아주신 조형숙 중앙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님, 김은희 대유 유치원 원장님, 김오경 자연이랑 어린이집 원장님, 임미령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영유아정책자문위원회 위원장님, 우영혜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 회장님, 이중규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회장님, 박영란 한국 사립유치원협의회 공동대표님 이혜연 전국 장애영유아부모회 고문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미래 세대를 위한 적절한 재정 투자와 체제 개편을 통해 취학전 영유아에게 최선의 이익이 돌아갈수 있도록 구체적인 대안이 제기되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이 토론회에서 최근 유아교육과 보육계에서 이슈가 되는 유아무상, 의무교육, 유보통합에 대해 함께 논의하고, 대한민국의 영유아의 발달과학습에 도움이 되는 대안이 도출되면 좋겠습니다. 유튜브 생중계를 통해 참여하시게 될 국민 여러분께서도 적극적인 의견 개진을 통해 지속가능하고, 현실가능한 다양한 정책들이 제시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광주 동구남구갑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윤영덕 입니다.

대한민국 미래 유아교육·보육 체제개편을 위한 연속 토론회 중, 1차 토론회인 〈대한민국의 미래 유아교육·보육 체제 이대로 괜찮은가?〉를 육아정책연구소와 교사노조연맹, 그리고 존경하는 여러 의원님과 함께 개최하게 되어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최근 미래세대를 고려한 유아 의무교육 및 무상교육·보육 정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내년도 정치권의 지각 변동을 앞두고 국가가 책임지는 교육 및 돌봄 체계 구축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해결되지 못한 유보통합 정책뿐만 아니라, 유아 무상교육에 대한 논의 역시 시작되어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유치원이 법률상 학교로 규정되어있음에도 기간학제화 되어있지 않아, 미래 교육체제를 논의하는 장에서 동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한 그간 사립유치원들이 학교 정체성을세우지 못해 발생했던 여러 사회적인 문제들도 많이들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대한민국 유아교육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유치원이 '유아학교'라는 학교로서의 정체성을 정립할 수 있어야합니다. 또한 유아 의무교육과 무상교육 및 보육 제도에 대한 정치적 관심을 수용하면서도 최종적으로 영유아를 중심으로 정책이 이루어져야 유아교육이 바로 설 수 있습니다.

오늘 발제를 맡아주신 박창현 육아정책연구소 미래교육연구팀장님, 윤지혜 전국국공립유치원노조 위원장님, 토론을 맡아주신 조형숙 중앙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님, 김은희 대유 유치원 원장님, 김오경 자연이랑 어린이집 원장님, 임미령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영유아정책자문위원회 위원장님, 우영혜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 회장님, 이중규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회장님, 박영란 한국사립 유치원협의회 공동대표님 이혜연 전국 장애영유아부모회 고문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토론회가 유아 무상교육, 기간학제화, 유보통합에 대한 이슈들을 함께 논의하고, 대한민국 유아교육정책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유의미한 자리가 되리라고 기대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교총 회장 하윤수입니다.

'대한민국 미래 유아교육·보육 체제 이대로 괜찮은가?'를 주제로 유아교육과 보육 이슈 제안을 위한 제1차 토론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우선 유아교육 정책과 제도 발전을 위해 연속 토론회를 기획하고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주신 육아정책연구소 박상희 소장님께 감사 말씀드리며, 공동 주관으로 함께 해주신 교사노동조합연맹과 강득구, 강민정, 김병욱, 김종민, 윤영덕 의원님, 김민석 보건복지 위원장님, 고견을 들려주시고자 참석해주신 발표자 및 토론자분들 모두에게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토론회는 대한민국 미래 유아교육·보육 체제 개편을 위한 연속 토론회 중 첫 번째로 유아교육과 보육계의 이슈 현안 중 가장 많이 회자되고 있는 유아교육의 완전무상화와 의무교육화, 유보통합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자리입니다.

유아 무상교육의 확대와 의무교육의 틀 안에서의 유아교육시스템 구축, 유아교육과 보육제도의 통합에 대한 정치적 관심도가 증가하고 영유아 교육·보육에 대한 국가 책임 목소리가 높아지는 시기에 유아교육과 보육의 과거, 현재, 미래 전체를 아우르는 오늘 토론회는 매우 시의적절하다 할 것입니다.

아울러 지난 정부에서 유아교육·보육통합위원회 출범 이후 여전히 답보상태인 유보통합에 대해 서도 모든 영유아가 높은 수준의 유아교육 및 보육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유아교육·보육 공동체의 충분한 논의가 이뤄지길 바랍니다.

해마다 저출산 극복을 위한 온갖 정책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아이들을 키우기 좋은 대한민국을 넘어 미래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인재인 우리 영유아들이 행복하길 바라는 것이 유아교육·보육 공동체 모두의 염원일 것입니다. 한국교총 또한 유아교육계의 자긍심 회복과 타 학교급과의 불균형 해소, 일제잔재 청산을 위해 유치원을 '유아학교'로 명칭 변경하기 위한 활동을 비롯하여 저출산 극복과 사교육비 경감, 유아교육의 발전을 위해 만3~5세 유아에 대한 무상의무교육 실현 등 유아교육의 발전을 위해 목소리를 높이며 정책적 대안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유아교육과 보육 이슈 제안을 위한 토론회 개최를 다시 한번 축하드리며, 모쪼록 이 귀한 자리를 통해서 대한민국 유아교육에 대한 발전적 논의가 이뤄지고 정책과 제도에 대한 올바른 성찰을 위한 소통의 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곳에 함께하신 모든 선생님들의 건강과 건승을 기원합니다.

미래 유아교육, 보육 체제 개편을 위한 제언: 유아무상·의무교육, 유보통합을 중심으로

박창현 1 육아정책연구소 미래교육연구팀장

대한민국 미래 유아교육 보육 체제 개편을 위한 연속 토론회 (1차 토론회) 대한민국의 미래. 유아교육보육 체제 이대로 괜찮은가?

미래 유아교육,보육 체제 개편을 위한 제언: 유아무상, 의무교육, 유보통합 논의를 중심으로

육아정책연구소 미래교육연구팀장 박창현



목 차



- 1. 미래 유아교육·보육 체제개편의 필요성과 배경
- 2. 유아무상, 의무교육, 유보통합을 말하다!
- 3. 미래 체제 개편을 위한 도전과 과제

NOTICE

- 1. 현재가 아닌 미래, 향후 5년, 10년의 변화를 생각해보기
- 2. 영유아의 관점에서 생각해보기
- 3. 서로 함께 가기 위한 접점을 찾기
- 4. 연구는 연구일 뿐, 민주주의는 토론에서 시작하고, 갈등으로 우리는 성숙해진다!



미래 유아교육・보육 체제 개편의 필요성과 배경

2021년 9월말, 현재 대선공약 현황

정세균 "교육부 폐지, 인재혁신부 창설...취학연령 만5세 부터"

교육 개혁 대선 공약 발표...444 학제 허용 (서울=뉴스1) 이준철 기자 | 2021-08-26 1021 송고

유치원교사노조, 국가돌봄청 - 초등취학연령 인하 정세균 공약 비판

尹 보육공약 발표...만5세 전면무상보육·육아휴직 확대

함목: 2021.09:15 17:24-42 · 아정: 2021.09:15 17:27:11 □ 0



"유보통합 생각은?" "찬성한다", 서로 첫 질문자 된 원회룡 유석열

국인의 다 전선 확인 100 전략 발표에 사용기 사용에 발생한 '그런나 복두리는 100호에 -우셨다에 문제를 제상되기, '노숙에 대한 국가복회에서 '에너들'이 다양하고 기자 100차 '소등의 현재에 대학자를 유럽한 대학자의 사용기 사용자는지' 불편으로 학교들이다. -다다들하는 '소에 대한 다음수는



이낙연 '모든 영유아, '차별없는 돌봄' 필요..유보통합 모델 마련할 것'

이내선, 유지함(시원에 통해(유보통해) 위한 표. 이에 나는 것은 201.00.19 이내선 '에임에를 유치한 동화한' 유보통해 보호. 조례철보, 201.00.19 이내선 '제함' 있는 통통에서 지금 위해 '유보통. 중하는 나는 201.00.10 유전노스와 지하보기 HOME > 사회/정책 > 정책 > 기회연자

"유치원-이린이집 일원화, 교육부 관할 통합에 압도적 찬성"

음 권현경 기자 ○ 중인 2021.0025 1505 ○ 중단 5

어린이집 관계자 등 2만 6164명 설문 참여.한어총, 대선 예비후보정당 대표 만나 보육계 요구 사항 전달

【베이비뉴스 권현경 기자】



미래 유아교육·보육 체제 개편의 필요성과 배경

2017년 대선

https://www.ibabynews.com > news > articleView *

남북통일보다 어렵다는 '유보통합', 쟁점은? - 베이비뉴스

2017. 6. 27. — 미취학 아동이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중 어느 곳에 다닐지라도 균등한 교육·보육 서비스를 받게 하려는 것이 유보통합의 취지이다. 다시 말하면, 유치원과 ...

https://www.eduinnews.co.kr > news > articleView *

[기고] 유보통합을 위한 세 가지 제언 - 에듀인뉴스(EduinNews)

2018. 11. 14. — 유보통합이란?유지원 + 어린이집을 말 한다. 물리적 통합이 아니라 화학적 통합 용 이루기 위해서는 현재 보건복지부 소관인 어린이집과 교육부 소관인 ...

http://m.blog.naver.com > omega736 🔻

유보통합 마스터하기 - 네이버 블로그

2015. 6. 21. — 1. 유보통합이란 무엇인가? ... 일원화 시키겠다는 내용입니다. 즉, 유치원과 어린 이집을 통합하자는 내용입니다. 경우사회복지시설로 구분되어 보건

https://www.donga.com > news > Society > article > all •

文정부 "포기 안했다"던 유보통합...결국 물 건너갔나 - 동아일보

2019. 5. 26. — 유보통한은 초등학교 취학 전 만 3~5세 영·유아가 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서로 다른 기관에서 누리과정 교육을 동일하게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합부처 ...

https://www.eduinnews.co.kr.) news.) article/view.

· [학제개편은 이렇게-특별기획] 새로운 학제개편의 기본 방향

2017. 6. 13. — 우리나라의 현행 학제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68년간 고수해온 단선형 학제이다. 위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6-3-3-4의 기본학제를 중심으로 하는 단 ...

https://www.eduinnews.co.kr > news > articleView *

학제 개편 '틀' 바꾸기는 어렵다...교육과정제도 변화부터 - 에듀인

2020. 1. 13. — 그동안 학제개편 논의에서 교육과정은 주목받지 못한 내용이라 주목된다.경기 도교육연구원은 13일 '미래교육을 위한 학제 혁신 방안'(연구책임자, ...

https://www.kedi.re.kr > main > research > selectPubForm 🔻

KEDI 발간물 - 연구보고서 | 한국교육개발원

... 학제 개편 논의의 배경 | 13 1. 학제의 개념 및 유형 | 15 2. 학제 개편의 필요성 | 16. III. 우리나 라의 학제 변천 과정 | 29 1. 근대 이전의 학제 변화 | 31

https://scienceon.kisti.re.kr > srch > selectPORSrchReport **

학제개편의 쟁점 분석 -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학제 개편에 대한 논의는 1965년부터 주기적으로 계속되어 왔는데, 1965년에는 정부가 6-6-4제로 의 전환을 발표했다가 철회한 적이 있으며, 1987년에는 교육개 학 ... 주래연구기과: 한국교육개발왕 Korean Educali

https://www.ioongang.co.kr > article *

6-3-3-4 학제개편...무엇이 문제인가 | 중앙일보

1981 5. 19 — 이규호문교부장관의 - 국회발언으로 학계에선 또다시 학자개편 논의가 본격화될 조짐이다. 해방후 정부수립직후 미국의 교육제도를 본받아 마련된 현행 ...

ttns://www.erluiin.co.kr.) news.) article\/iew \

미래 유아교육・보육 체제 개편의 필요성과 배경

당면 과제

- □ 취학 인구 감소, 저출생으로 인한 유치원 어린이집 소멸 위기
- □ 유치원의 학교 정체성 강화 필요, 공공성/공교육화 지속
- □ 공사립 유치워. 유-보 격차
- □ 취약영유아를 위한 포용적 지원체계 지속적 구축
- 장애영유아 유아 의무교육에 대한 요구
- □ 미래 교육체제에 대한 대응
 - 자치와 분권 강화, 국가교육위원회 출범-중앙부처-단위유치원(유아학교)의 새로운 경로에 대한 적응 필요
 - 디지털, 에듀테크 관련 유아교육, 교사교육 방향 설정 필요
 - 기후위기 대응 지속가능한 교육, 통일 한반도 미래교육 대비 시민성교육 요구
 - 미래 유아학교 교육과정 개정, 교원양성체계 개편 필요
 - 학급 당 교원 수 제고, 교사 권리 존중 및 처우 개선 강화

미래 유아교육・보육 체제 개편의 필요성과 배경

당면 과제

- □ 유아교육특별회계 임시체계 종료, 신체제 구축에 대한 논의 필요
 □ 아동학대 없는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국가책임 유아교육기관 요구
 □ 초등과의 학교급 연계 강화, 유아교육의 기간학제화에 대한 요구
 □ 0세부터 평생교육 체계 속에서의 이음새 없는 교육에 대한 요구
 □



© CanStockPhoto.com

미래 유아교육・보육 체제개편의 필요성과 배경

유아교육의 역사 '유아교육의 공교육체제 확립'와 '유-보 통합'을 통한 유아교육 질 제고를 위한 허스토리(herstory)

- ° 1949년 교육법은 유치원을 교육기관으로 규정
- 1962년 유치원 시설 기준령 제정, 1969년 유치원 교육과정 공포
- 1976년 서울 4개, 부산 1개 공립유치원 설립
- 1981년 수립한 유아교육진흥종합계획서, 유지원취학률은 38% 목표, 사립유지원 증설, 전국의 많은 사설학원과 무인가 유치워 하시적으로 규제 양화 정식 유치워으로 이가
- -1980년에 861개였던 사립유치원 수가 1987년 3.233개로 4배 가까이 증가
- 2005년까지 만 5세 무상교육 정책 추진
- 1997년 유아학교 체제 구축 및 공교육체제 확립방안
- 2004년 유아교육법 제정, 유아교육 선진화 정책, 유-보 통합 정책, 누리과정 정책 등
- 2011 이후 누리과정 시대. 2012년 누리과정 바우처 지급
- 교육부 '유아교육혁신방안'('18-'22)('17.12)
- 유아교육 공공성 프레임 제시, 소외계층을 위한 정책, 공영형 유치원, 놀이중심 누리과정 개정방안 등 포함
- 한유총 사태: 집단 휴업시도('17.9) 유치워 사유재산권(시설사용료) 주장
- 사립유치원의 학교 정체성 논쟁 심화(학교 vs 자영업), '19, 04.23 서울시교육청 한유총 인가취소(이후 법적 회복)

- · 한유총 사태로 '유아학교'라는 용어 소환
- 공공성과 학교 정체성 강화, 일제 잔재청산의 의미에서 유아학교에 대한 새로운 의미화 과정 부여
- · 부모연대와 정치세력화, 시민감사단의 활약
- 시민과 국민들의 의식을 일깨우고 유치원 문제에 관심을 집중
- 박용진 3법,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위한 출발
- 교육부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18, 10)(교육부 보도자료, 2018, 10, 25)
-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 및 정책에 관한 로드템 제시, 유치원이 "학교'이며 '공교육기관' 임을 재천명, 국공립
 40% 조기달성 정책과 사립 유치원의 공공성 2호에 대한 큰 그림이 그려져 있음.
- * 유아교육 공공성 확보를 위한 본질적 개선 방안에 대한 논의로 교육부 및 교육청들의 사립유치원 운영 모델 다양화를 통한 공공성 확보 정책(공영형(공공형), 매일, 위박형, 협동조합형 유치원 등) (교육부, 2020)
- 서울시교육청의 2+5 제도 도입도 화두에 오르며 미래지향적인 유아교육 정책의 방향이 여러 관점에서 모색 퇴
- 유아학교, 의무교육화, 학제개편, 유보통합/유보분리 논의
- 유아교육특별회계 종료, 무상교육비 재정지원 부담 주체 논란
- 어린이집 장애유아 의무교육 논의
- · 강득구의원실, 유아학교 명칭 면경 법안 상정

박창현·김근진·이재희·김진석·조혜주(2019).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위한 운영 모델 다양화 및 현장도입방안 연구. 교육부, 충남교육청의 내용을 바탕을 연구진 재구성

미래 유아교육 보육 체제 개편의 필요성과 배경

- □ **'유아학교'**의 재개념화 1: 학교 정체성 강화, 일제 잔재청산
- 2018 사립유치원 사태. 일제 잔재청산에 대한 요구로 '유아학교' 의 과거로부터의 소화. 현재에서 새로운 의미화
- -〉 유치워의 학교 정체성, 공공성 및 공교육화에 대한 요구, 건강한 사립학교로서 기능하는 유아학교에 대한 요구
- -> 공공성 강화 정책으로 공공 유아학교, 학교, 의무교육(기간학제화) 개념 소환, **의무교육, 완전무상교육**에 대한 논의 확대
- □ '유아학교'의 재개념화 2: 미래 유아학교와 교육혁신에 대한 요구
- -> 코로나 19 로 미래 개념 추가, 미래 유아학교 로 유아학교의 재개념화 개념 등장
- -> 양질의 통합형 미래 유아학교에 대한 관심 증가
- -> 디지털(에듀테크), 기후위기 대응 지속가능한 교육, 개별화 교육 및 평생교육의 강화, 자치와 분권 강화 공간혁신, 양질의 교사와 교육에 대한 관심 증가, 미래 교육과정과 교원양성체계개편에 대한 높은 관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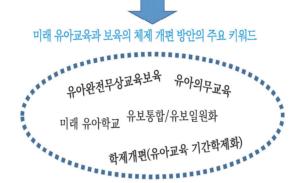
미래 유아교육・보육 체제 개편의 필요성과 배경

인구구조의 변화와 4차 산업혁명에 따른 미래 대응 신체제 구축 필요

<u>코로나 19 팬데믹과 미래 한반도 정세 변화를 대응하여 지속가능하고, 교육, 보육 평등성이 실현되는</u>

새로운 미래 유아교육 보육 체제 개편 필요

유아교육과 보육의 국가책임제 강화와 높은 공공성, 양질의 교육·보육 필요



현장의 의견은?

〈박창현, 김근진, 윤지연(2021). 유아의무교육 및 무상교육보육의 쟁점과 과제. 육아정책연구소〉심층면담 분석 결과 (학계(유아교육, 보육, 재정), 교사 노조(유-보), 육아종합지원센터 시군구협의체 등, 유아교육행정협의회,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전국교직원총연합회, 장애영유아보육교육정상화를 위한 추진 연대 등)

- □ 유아완전무상교육에 대해 찬성하는가?
 - (참고) 현재 유아교육계, 보육계 강한 찬성!
- □ 유아의무교육(기간학제화)에 대해 찬성하는가?
- (참고) 유아교육계 대부분 찬성, 일부 현실가능한 안 제시 필요하다는 의견 보육계는 대체적 반대, 의견 유보
- □ 유보통합에 대해 찬성하는가?
 - (참고) 현재 유아교육계 유보통합 대체적 찬성(연령별 이원화 등 선제조건 중요) 보육계 대다수 찬성 입장

현장의 의견은?

- □ 교육부, 복지부, 제3의 청, 통합 부처를 고려 시 영유아의 관점에서 본다면 어느 부처가 적절한가?
- (참고) 유보통합을 가정한다면, 대다수 교육부로의 통합이 적절하다는 입장 제 3의 청에 대한 소수의견 존재,

(대다수 지원청-지자체 수준에서 유-보가 분리되어 있는 현실에서 제3의 청은 더 혼란스럽다는 입장)

- □ 유보 일원화를 한다면, 0-2세는 평생교육의 관점에서 교육부에 포함해야 하는가? 복지부가 관리해야 하는가? (참고) 유아교육계는 0-2세는 복지부가 더 적합. 보육계. 장애영유아 연대는 교육부가 적합하다는 입장
- □ 유아학교 명칭 변경
- (참고) 유아교육계 100% 찬성, 보육계 찬성('학교'라는 명칭에 대한 이견)
- □ 학제개편
- (참고) 유아교육계 학제개편은 만 5세, 만 4-5세, 또는 3-5세 기간학제화를 의미, 현재 시스템에서도 충분히 가능함. 학제개편이라는 용어가 필요없다는 의견 (만 5세 초등 취학에 대한 오해만 불러일으킴.) 보육계 만 5세 초등 취학 학제개편 반대





유아무상, 의무교육, 유보통합을 말하다!



유아 완전무상교육, 어떻게 가능한가!

• 정책 제안의 배경 및 가능성

- □ 미래 유보 체제개편을 기반, 완전무상교육비 지원을 통해 교육 불평등을 해소, 취학 전 통합된 관리체계 구축 가능
- □ 현재 유아교육법에 무상교육 근거 조항이 이미 존재하고 있으나 부분 무상으로 실질적으로 체감 효과가 부족
- □ 유아교육특별회계 임시체계의 개선 후, 통합된 구조에서의 완전 무상교육 체제 구축 필요
- □ 완전무상교육과 보육은 학부모의 출산 및 육아 비용 부담을 완화에 기여, 저출생 개선효과 기대
- □ OECD 교육선진국의 국가책임의 무상 유아교육과 보육 강화, 세계적 추세와 발맞춤
- □ 현재시점에서 완전무상교육이 의무교육보다 실현 가능성이 높음.

참고하기 1

〈표 1〉 2020년 주민등록 인구통계(12월 기준)

연령(만)	인구(명)	연령(만)	인구(명)			
0세	265,087	6세	440,710			
1세	304,651	7세	441,560			
2세	331,606	8세	489,936			
3세	363,250	9세	476,474			
4세	412,429	10세	473,919			
5세	444,367	11세	448,450			
0-5세	2,121,390	6-11세	2,771,049			

자료: 행정인전부 홈페이지 https://jumin.mois.go.kr/주민등록 인구 및 세대현황(2021. 7. 7. 인출)

〈표 2〉 2020년 유치원·초등학교 학교수, 학급수, 학생수, 교원수, 직원수

구분	학교수	학급수	학생수	교원수	직원수
유치원	8,705	36,634	612,538	53,651	24,978
초등학교	6,120	123,517	2,693,716	189,286	93,529

자료: 한국교육개발원(2020), 2020 교육통계 분석자료집-유·초·중등교육통계편, 5-6.

특히 '21년도에 최초 30만명대 출생자인 '17년생이 유치원 입학을 시작, 교육 현장에서 학령인구 감소를 체감하기 시작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므로,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적응 정책"을 공교육 시작 단계인 유아교육 단계부터 본격이 추진이 필요한 실정임.

2026년 전체 초등학생 연령이 될 아동 수는 약 212만명이고, 2020년 초등학생 연령대인 만 6-11세 아동 수는 약 277만명으로 예상되고 있다. 2026년에는 현재보다 초등학생 연령이 될 아동 수 65만명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학급당 학생수를 20명으로 가정할 시 초등학생 65만명 감소 시 학급수는 3만2500학급 감소(유휴교실 3만2500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유치원의 경우, 2026년에는 2020년 유치원 학급수 36,634개의 88.7%인 32,500개 학급을 초등학생 수 감소로 인한 초등학교 유휴교실로 충당 가능한 수준임.

출처: 박창현, 김근진, 윤지연(2021). 유아의무교육 및 무상교육보육의 쟁점과 과제. 육아정책연구소.

참고하기 2

- ✓ OECD 회원국의 경우, 2017년 유아 취학률은 2005년과 비교해 11%p 증가한 97%이며, 우리나라는
 2010년보다 10%p 상승한 95%로 완전취학률이 90% 이상을 유지(OECD, 2020).
- ✓ 3세 미만의 영아에 대한 양질의 교육과 보육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취학전 영유아에 대한 국가책임 무상교육과 보육제도를 통한 공공지출이 늘어나고 있음.
- ✓ 프랑스, 미국 등에서는 의무교육제도의 도입을 통해 학제를 확대하여 교육기본권을 확보하고, 평등한
 유아교육과 보육을 실현해 나가고 있는 추세임.
- ✓ 우리나라는 OECD 평균(34%)과 비교해 볼 때, 사립 비중이 여전히 높고, GDP 대비 공교육비는 0.5%
 로 OECD 평균보다 아직까지는 낮은 수준



- ✓ 유아교육과 보육의 공공성 강화와 양질의 교육보육 수준의 질적 제고를 위해서는 공교육화에 대한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잘 체계화된 제도하에 적재적소의 재정지원이 필수
- ✓ 우리나라는 아직도 무상교육, 보육비 마련을 임시회계로 운영
- ✓ 무상교육도 부분 무상교육과 보육
- ✓ 사립유치원의 경우, 학부모 부담금이 여전히 높은 수준
- ✓ 무상교육과 보육의 기준과 현황도 서로 달라 교육보육의 격차로 교육평등성 저해.

미래 유아교육과 보육체제 개편과 유아학교 체제 정비의 필요성이 제기됨.

출처: 박창현, 김근진, 윤지연(2021). 유아의무교육 및 무상교육보육의 쟁점과 과제. 육아정책연구소.

유아 완전무상교육, 어떻게 가능한가!

• 쟁점과 이슈

- □ 미래사회 대응을 위한 유-보 체제 개편 없이는 완전무상교육 불가능
 - ->통합된 미래유아학교 체제 구축을 위한 기반 마련이 필수
 - 유아학교 명칭변경, 재원확보 구상 및 유아교육특별회계 개편, 유보 일원화 세부안 마련 (법 취지의 명분에 부합한 법 개정과 유-보 일원화, 부처 및 조직개편, 교사 자격제도 등 고려)
- * 유보 분리시 3-5세 유아에 대한 지원 및 서비스 격차 현재보다 더 커질 가능성 높음(교육재정 vs 보육재정 등)
- □ 재원 확보 방안에 대한 보다 면밀한 고려-〉 2026년 이후 완전무상교육 추진을 위한 재원 확보마련을 위한 합의필요
- ☐ 유아 완전무상교육이 **표준유아교육비 수준**의 재정지원 체제 정비
- 유아교육 쪽의 급식비, 특성화비, 방과후과정비 등의 수익자부담의 경비 부담에 관한 논의 필요
- 유아완전무상교육비 지원을 재정결함보조금으로 가능할지의 여부
- □ 완전무상교육정책 추진 시 자율형 사립 유아학교를 인정해야 하는지의 여부
- □ 사립 유아학교 재정지원시 법인화 여부에 따른 차등지원을 해야 하는지, 설립유형에 관계없는 재정지원을 해야 하는지?

유아 완전무상교육, 어떻게 가능한가!

• 시나리오 기반 재정 추계

□ 3-5세 유아무상교육 재정추계의 총합을 살펴보면, 연간 5조 6,065억 정도임.

구분	3-5세 무상교육 재정추계
교육과정비	5조 606억원
방과후과정비	5,459억원
연간 소요비용	5조 6,065억원

• 3-5세 유아 무상교육 재정 추계 기준

- ✓ 재정추제를 위한 3-5세 유아 수는 2020년 12월 주민등록인구통제상 0세가 26만5천명이고, 저출산 추세가 제속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2026년 3-5세 인구는 각각 26만병으로 가짐
- ✓ 교육과정비는 정규교육과정을 위한 비용으로 표준유아교육비를 기준으로 추계
- ✓ 의무교육은 유아의 통학거리 내에 있는 어느 유치원을 가던 공립유치원 수준의 교육이 제공되어야 하기 때문에 공립유치원의 표준유아교육비를 기준으로 산정하였으나, 무상교육은 공립유치원과 사립유치원(및 어린이집)의 표준유아교육비가 다르기 때문에 별도로 산정하여 합산
- ✓ 방과후과정은 정규교육과정이 이니기 때문에 방과후과정비는 표준유이교육비에 포함되지 않지만, 2013년 3-5 세 누리과정 도입 이후 유아 1인당 연간 공립유치원 60만원, 사립유치원(및 어린이집) 84만원이 지급되고 있으며, 방과후 돌봄의 중요성이 점점 더 강조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방과후과정비를 별도로 산정.
- ▼ 방과후과정비는 무상교육에서는 사립유치원(및 어린이집)은 유아 1인당 연간 84만원으로 산정하였으나, 의무교육에서는 교육과정비 추계에서와 마찬가지로 공립유치원을 기준으로 유아 1인당 연간 60만원으로 산정
- ✓ 연간 소요비용은 교육과정비와 방과후과정비를 합산한 금액으로 산정
- ✓ 이에 따라 3-5세 무상교육을 위한 연간 교육과정비는 5조 606억원, 연간 방과후과정비는 5.459억원, 연간 소요 비용은 5조 6.065억원으로 산정



유아 의무교육(기간학제화), 어떻게 가능한가!

• 정책 제안의 배경 및 가능성

- □ 유아의무교육(기간학제화)을 실시하여 '유아학교'를 통한 국가완전책임제, 완전무상교육 실현 가능
- □ 교육불평등 및 교육시스템의 획기적 개편, 저소득층 지원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교육의 측면에서 공익의 틀을 짜기 위한 개혁의 일환으로 유아 기간학제화 가능
- □ 유아 무상교육 및 무상보육(어린이집) 제도의 실효성 저하로 인한 개선이 필요
- □ 유보 질적 격차의 실질적 완화 가능
- □ 유아의무교육이 아닌 상황에서 유치원은 법률상 학교임에도 초중등 학교급에서 항상 배제되어 왔음. 유아학교로서 실질적 역할 기대 가능
- □ 유아학교의 균등한 설치, 교육 보장, 의무취원, 학부모의 선택권 등의 문제들은 유아교육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유연하게 적용한다면 가능

출처: 박창현, 김근진, 윤지연(2021), 유아의무교육 및 무상교육보육의 쟁점과 과제, 육아정책연구소.

참고하기 3 학교 의무/무상교육 현황

- ✓ 유치원은 현재 유아교육법상 무상교육(유아교육법 제24조)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소요비용의 일부에 대해서만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음.
- ▼ 충학교와 중학교는 의무교육(교육기본법 제8조제1항,
 ▼ 중등교육법 제12조)이고, 고등학교는 무상교육(초·중등교육법 제10조의2)이 이루어지고 있음.
- ✓ 국공립 비율(학생 수 기준)을 보면, 유치원은 30.4%이나, 의무교육인
 초등학교는 98.6%,
- ✓ 의무교육인 중학교는 83.8%이고, 무상교육인 고등학교는 58.4%임.
- ✓ 사립학교 중 법인화 비율은 초중고는 사립학교법상 모든 사립학교는 학교법인으로만 설립되어야 하기 때문에(사립학교법 제3조) 100%인 반면, 유치원은 사립학교법상 학교법인으로 설립할 의무가 없어 13.6%에 불과
- ✓ 법인 중 학교법인 비율은 초중고는 100%이지만, 유치원은 26.6%에 불과, 이에 따라 전체 사립유치원 중 학교법인 비율은 3.6%에 불과
- ✓ 사립학교 지원 방식은 사립 중고등학교는 재정결함보조금으로 학교에 직접 지원되지만, 유치원은 바우처 방식으로 학부모를 통해서 유치원에 지원되고 있음.

〈표 3〉 유초중등 의무/무상교육 관련 통계 비교

(= 37					
구분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의무교육 여부	무상교육(일부)	의무교육	의무교육	무상교육	
국공립 비율 (학생 수 기준)	30.4%	98.6%	83.8%	58.4%	
사립학교 중 법인화 비율	13.6%	100%	100%	100%	
법인 중 학교법인 비율	26.6% (전체 사립유치원 중 학교법인 3.6%)	100%	100%	100%	
사립학교 지원 방식	학부모 바우처		재정결함보조금	재정결함보조금	

- 주: 1) 국공립 비율(학생 수 기준)은 2021 교육통계에 근거
- 2) 법인화 비율은 2020 교육통계연보에 근거
- 3) 의무교육 여부는 교육기본법, 유아교육법 및 초중등교육법에 근거

참고하기 4 초중등 의무교육 법규정

- ✓ 대한민국 헌법 제31조제2항은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의무교육으로 한다고 규정, 이에 따라 초등교육은 헌법에서 의무교육으로 규정하고, 그 외의 교육은 법률에 따라 의무교육이 될 수 있음. 헌법 제31조3항은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고 규정함.
- ✓ 교육기본법 제8조제1항은 의무교육은 6년의 초등교육과 3년의 중등교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현재 우리나라의 의무교육은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으로 구성됨. 고등학교는 초·중등교육법 제10조의2에 따라 무상교육으로 규정됨. 동법은 제10조의2제1항은 무상교육의 범위를 입하금. 수업료. 학교유역지원비, 교과용 도서 구입비로 규정한.
- ✓ 초·중등교육법 제13조는 모든 국민에게 자녀가 초등학교 및 중학교의 의무교육을 받도록 할 취학의무를 부여함. 초중등 의무교육의 취학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부모에게는 초중등교육법 제68조제1 항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
- ✓ 초·중등교육법 제12조제1항은 초중등 의무교육의 실시 주체는 국가로 규정하고 있으며, 국가에게 의무교육을 위한 시설을 확보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음. 이에 따라 동법 제12조제2항은 지방자치단체는 그 관할 구역의 의무교육대상자를 모두 취학시키는 데에 필요한 초등학교 및 중학교를 설치·경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함. 그러나 공립의 초등학교 및 중학교만으로는 의무교육대상자를 모두 취학시키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동법 12조제3항은 지방자치단체는 사립의 초등학교 및 중학교에 일부 의무교육대상자에 대한 교육을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함. 이에 따라 사립의 초등학교 및 중학교에서도 의무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음.
-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은 읍·면·동의 장은 해당 연도에 만6세가 되는 아동을 조사하여 취학아동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은 교육장이 다음 해에 취학할 아동의 입학기일과 통학구역을 결정하고 읍·면·동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함. 이에 따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은 교육장에게 이러한 통보를 받은 읍·면·동의 장은 입학할 학교를 지정하고 입학기일을 명시하여 취학할 아동의 보호자에게 취학통지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함.
- ✓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89조제1항제11호는 초등학교의 통학거리는 1500미터 이내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초등학교 의무교육을 받게 되는 아동은 거주지로부터 1500미터 이내에 있는 학교에 통학하게 됨.

출처: 박창현, 김근진, 윤지연(2021), 유아의무교육 및 무상교육보육의 쟁점과 과제, 육아정책연구소.

유아 의무교육(기간학제화), 어떻게 가능한가!

• 쟁점과 이슈

- □ 유아 의무교육의 강제성 충족 여부
 - 의무취학, 출석, 학군에 따른 유아 근거리 배치 기준의 문제 해결 가능 여부
- □ 유아 의무교육의 균등성의 충족 여부
- 공사립, 지역별 기관의 질적 격차의 문제
- □ 낮은 국공립 비율, 사립유치원 법인화 문제 의무교육시 최소 국공립 80% 이상일때 가능?
- □ 학부모 교육 선택권의 문제
- 다양한 교육기관 선택의 권리 보장의 문제, 홈스쿨링 제도 도입 필요?
- □ 만 3세 의무교육 도입이 발달에 적합한지의 문제
- □ 유보통합시, 0-2세 포함의 문제

출처: 박창현, 김근진, 윤지연(2021), 유아의무교육 및 무상교육보육의 쟁점과 과제, 육아정책연구소.



유아 의무교육(기간학제화), 어떻게 가능한가!

• 시나리오 기반 재정 추계

구분	5세 의무교육	4-5세 의무교육	3-5세 의무교육
교육과정비	5조 6,075억원	6조 1,779억원	6조 7,860억원
방과후과정비	5,233억원	4,979억원	4,680억원
연간 소요비용	6조 1,308억원	6조 6,758억원	7조 2,540억원
(참고)병설유치원교실전환비용	6,826억원	1조 4,085억원	2조 4,427억원
(참고)단설유치원 건립비용	10조 5,021억원	21조 6,698억원	37조 5,804억원

출처: 박창현, 김근진, 윤지연(2021). 유아의무교육 및 무상교육보육의 쟁점과 과제. 육아정책연구소.



미래 체제 개편을 위한 도전과 과제

미래 유아교육 보육 체제 개편의 방향: 가능한 가안(교육부 통합 가정)

유보 체제 개편을 위한 기반조성기

완전무상교육실현기

유아교육 기간학제화를 위한 질적 도약기

2022년 새정부 시작

2026년 이후(가안)

국공립 이용율 약 80% 시점

유보 체제 정비 (법령, 교사자격, 부처 및 조직, 유아학교교육과정, 재정지원체계 등)

유아학교 체제하의 완전 무상교육 실현 유아학교 체제 하의 4-5세 의무교육실현

	세 6시 년세계 6)		
	기반 조성기	완전무상교육 실현기	기간학제화를 위한 도약기
제도	유아학교 명칭변경(법개정) 유아부분무상교육 지원금 일부 강화	표준유아교육비 수준의 재정지원	유아학교를 통한 의무교육단계 실현(법개정) 만 5세부터 단계적 실현 가능
전달체계	유보일원화 추진(추진단/위원회구성) 교육청 유아교육과 독립, 유-보업무 담당국으로 승격	-국가교육위원회-교육청/지자체 협업-유아학교 체 제 구축	-국가교육위원회-교육청/지자체 협업-유아학교 체제 구축(평생교육시스템 구축)
교육과정	누리과정 명칭 변경 (유아학교 교육과정으로 개정, 미래담론 포함)	유아학교 교육과정 (0-2세 포함시 영유아학교 교육과정 포함)	유아학교 교육과정 (0-2세 포함시 영유아학교 교육과정 포함, 0-3세는 무상)
예산/재정지원	교육부, 바우처 지원	교육부, 사립 재정결함보조금	교육부, 사립 재정결함보조금
교사/연수	유보일원화시 유치원교원 자격 획득을 위한 기준안 마련 등, 관련 연수 강화	유아학교 교원 제도로 일원화	유아학교 교원 제도로 일원화

출처: 박창현, 김근진, 윤지연(2021). 유아의무교육 및 무상교육보육의 쟁점과 과제. 육아정책연구소.

도전과 과제

- 유아학교 법안 통과 촉구
- 재원마련, 유보일원화 세부 안 추후 연구 시행
- 국민적 합의 도출 필요
- 토론하기, 생각 모으기
- 아이들을 위한 최선의 이익을 도출하기
- 연속토론회는 to be continued~~

여러분들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열정적인 토론, 기대합니다! 댓글 달아 주시고, 연구진에게 의견 남겨주십시요~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겠습니다.



pixtastock.com - 46788223

감사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미래 유아학교

윤지혜 1 전국국공립유치원교사노조 위원장

우리가 원하는 미래 유아학교

윤지혜 1 전국국공립유치원교사노동조합 위원장

1. 들어가며

오늘 대한민국의 유아교육을 위해 마련된 논의 자리에 참여할 수 있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최근 제20대 대선을 앞두고 유아 무상교육, 의무교육 등 유아교육의 국가책임 확대와 관련된 다양한 정책들이 제안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유아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교육 현장 교사들의 목소리는 전혀 반영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대한민국 유치원 교사로서 어떻게 이 상황을 대처해 나가야 할까요? 오늘 이 자리를 통해 함께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모두가 원하는 진정한 미래 유아학교를 만들어 나갈 첫 발을 내딛기를 기대합니다.

유아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유아교육의 국가책임 확대를 통해 유아교육의 공공성이 강화되고, 진정한 출발점 평등이 실현되며, 학부모 사교육비 부담 경감 및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게되기를 바라며 발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 유아교육 없는 유아교육 정책. 이대로 괜찮은가?

내년도 제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여러 정당의 예비후보들이 다양한 교육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교육정책 중 유아교육 분야와 관련하여 논의되고 있는 내용이나, 현재 발표된 정책들을 후보나 정당 관련 없이 나열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영유아 무상교육과 출발점 평등
- 질 높은 보육·교육·돌봄을 위한 유보통합 일원화로 기본교육체제 마련
- 유보통합 모델, 돌봄 서비스
- 국공립 어린이집 지속 확충
- 어린이집 활성화 및 국가지원 강화
- 만 5세 전면 무상보육
- 국가 돌봄청 신설 등

안타까운 것은 정당이나 후보들의 정책, 공약, 교육관련 논의에서 유아교육을 교육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유치원 교사들은 그간 유치원이 교육기본법과 유아교육법을 근거로 설치된 학교임을 강조하며 교육기관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질 수 있기를 누구보다 간절히 바라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아교육을 바라보는 시각이 돌봄과 보육의 연장선상에만 놓여 있는 것은 현장에서 교육을 실행하고 있는 교사로서는 몹시 참담하게 느껴집니다. 또한 이러한 정책을 논의함에 있어서 유아교육의 주체인 유아, 학부모, 교사들의 의견이 얼마나 반영된 것인가, 충분한의견을 청취하였는가에 대한 의문도 듭니다.

생애 초기 교육의 중요성을 비롯하여 인적자원에 대한 투자 효과가 전체 생애 중 영·유아기에 가장 높다는 수많은 학자들의 연구결과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 계신 많은 분들이 이미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유아교육 정책에는 당연히 유아교육이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단순한 돌봄을 넘어서 우리 아이들이 평등한 생애 초기 교육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책을 개편하고 추진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여러 현장의 목소리와 의견이 필요합니다. 제가 몸담고 있는 국공립유치원만 해도 같은 국공립이지만 지역마다, 또는 초등학교 병설유치원과 단설유치원마다 겪는 상황이 몹시 다릅니다. 학부모마다 요구가 다르고 교사나 전문가들도 본인이 보고 겪은 바에 따라 제각각의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 현장의 의견을 듣고 숙의하는 과정을 통해 우리 아이들을 위한 바람직한 유아교육 정책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3. 인구변화. 출생아 수 감소와 변화하는 유아교육 현장

유아교육 현장에 있으면서, 인구절벽이 다가왔다는 말을 누구보다 가까이, 또 절실히 체감합니다. 몇 년 전만 해도 자녀의 유치원 입학을 위해 온 가족이 동원되어 유치원 추첨에 참석하고, 아이들이 태어나자마자 어린이집 입소 대기를 걸어놓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지금은 상황이 많이 달라지고 있는 듯합니다. 매번 대기인원이 줄을 서던 유치원에서 유아 모집이 미달하는 사태가 발생하고, 동네에 취원 대상 아이들이 없어 폐원하는 곳들도 종종 생겨나고 있습니다.

2021년 현재 유치원 취학 대상 연령인 만 3세 유아는 2017년생입니다. 통계청 지표에 따르면, 우리나라 2017년생 유아 수는 35만7,800명이고, 3년 뒤인 2020년생 유아 수는 27만2,300명입니다. 이처럼 해마다 약 3만여 명씩의 출생아 수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이와 같은 출산율로 볼 때, 2021년 현재보다 2024년의 만 3세 유아 수가 8만5,500명 가량 줄어드는 것입니다. 유아들의 취학 형태나 기관이 다르지만 단순히 숫자로만 계산해 본다면, 만 3세 학급 정원을 15명이라고 가정했을 때 3년 뒤에는 2021년에 비해 약 5,700여 개의 학급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모든 학급들이 15명 정원으로 운영되지 않으니, 더 많은 수의 유아교육기관 및 보육기관의 학급이 줄어드는 상황이 될 것이라 예상됩니다.



〈그림〉 출생아 수 및 합계 출산율(통계청, 『2020년 출생통계(확정), 국가승인통계 제10103호 출생통계』)

인구 수 뿐만 아니라 지역에 따른 차이도 크게 존재합니다. 교사로서 인구절벽을 체감하는 저와 같은 사람도 있지만, 어떤 선생님들은 출생아 수 감소를 전혀 느끼지 못한다고 합니다. 여전히 한 교실에 26명, 지역에 따라서는 최대 28명 이상의 유아들이 지내며 과밀학급으로 운영되고 있고, 입학을 원하는 수 많은 대기자들이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젊은 층이 모여드는 신도시에서는 학급 과밀화 현상 때문에 질 높은 교육이 이루어지기 어렵고, 유아 수가 줄어드는 구도심이나 농어촌에서는 유아들이 부족하여 기관이 통폐합하면서 집에서 멀리 떨어진 교육 또는 보육기관을 선택할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표〉 0-4세 시군구별 주민등록연앙인구(통계청,「인구동향조사」, 2021)

지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인구수	285,507	102,647	78,490	101,911	51,346	50,546	43,918	21,445	
지역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인구수	505.851	46.541	55,147	76.816	54,511	58.641	84,713	116.516	26,096

우리는 이런 상황들을 반영한 유아교육 체제 개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야 합니다. 누리과정실행, 유보통합, 행정부처의 일원화, 교사양성체제 개편 등 유아교육 체제 개편과 관련한 다양한논의들이 아주 오래 전부터 지속되어 왔습니다. 2012년 교육의 출발선 평등을 실행하기 위해 만5세 누리과정이 현장에 처음 보급, 실행되었습니다. 그러나 누리과정을 실행한 지 10년 차가 되는지금, 현장 교사들이 느끼기에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현실은 너무나 빠르게 변화하고 있지만 교육체제는 10년 전 그대로입니다.

교사들은 '이대로 괜찮을까? 5년 뒤, 10년 뒤에도 이와 같은 형태로 대한민국의 유아교육을 유지할 수 있을까?' 라는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과 같은 상황이 지속된다면 나는 계속 유치원 교사로 일할 수 있을까? 언제까지 유치원 교사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아직도 각자의 입장 차를 좁히지 못했다는 이유로, 유아교육 체제 개편이 논의에서 그치는 동안현장은 수많은 갈등 속에서 혼란만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미래의 유아교육과 보육 체제는 이대로 있어도 괜찮을까요? 지금의 체제를 그대로 지속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 되었다는 것에 아마도 많은분들이 동의하실거라 생각합니다. 이제는 새로운 미래 유아학교에 대해함께 논의하고, 토론하며함께 미래 유아학교가 향할 방향을 찾아가야 하는 시점입니다.

4. 미래 유아학교를 위한 논의

먼저, 유아 무상교육 및 의무교육이 실시되어야 합니다. 미래 유아학교는 무엇보다도 교육의 주체이고 수요자인 유아들 중심으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생애 초기 교육 불평등을 해소하기위해서는 모든 유아에게 양질의 교육을 받을 기회가 주어져야 합니다. 유아들이 사는 지역, 부모의소득 수준 등과 관계없이 모든 유아들에게 공정한 교육 기회를 주기 위해서는 무상교육 및 의무교육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현행 유아교육법 제24조에 초등학교 취학 직전 3년의 유아교육은 무상(無償)으로 실시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교육비 이외의 많은 비용을 학부모가 부담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은 학부모의 재정 능력이나, 유아들이 살고 있는 지역에 설립된 기관 유형에 따라 유아들이 받을 수 있는 교육의 기회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불평등 해소를 위해 정부에서는 표준유아교육비를 재산정하고, 단계적인 무상교육을 통해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합니다.

대부분의 OECD 국가들이 영유아기를 교육의 출발점으로 보고 모든 영유아에게 평등한 교육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만 3~5세 유아를 대상으로 무상 공교육 체제를 정립하였습니다(박신영, 박은혜. 2019; OECD, 2012). 이제는 우리나라도 유아 무상교육 및 의무교육을 실시하여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높이려는 노력을 거듭해야 합니다.

또한, 기관의 종류에 따라 교육의 질적 차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유아교육의 질 관리와 강화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유아교육 질 제고를 위해서는 국가 차원의 책임을 강화하여 보다 체계적인 교사와 기관에 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기관마다 천차만별인 설립기준 체계의 정비와,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한 교사양성체제 개편에 대한 논의들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유아교육기관의 체계적인 관리는 결국 공교육 안에서, 또한 학교 체제 안에서 행해져야 유아교육의 공공성 강화 및 양질의 유아교육을 실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앞서 발제문 초반에도 언급하였 등 유치원 교사들은 유아학교가 교육기관, 학교로서의 정체성을 가질 수 있기를 누구보다 바라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국회에서는 계류중인 유치원 명칭을 유아학교로 개정하는 유아교육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가 필요합니다. 또한 사립유치원에 대한 국가의 책임있는 관리와 지원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기관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영형 유치원의 모범 사례 발굴 및 지원이 지속되어야합니다.

국가에서 책임 있게 관리하는 유아학교, 교사와 기관의 질이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양질의 유아교육이 실행되는 유아학교, 어느 지역, 어떤 기관에서든지 균등한 교육의 질이 보장되는 유아학교 야말로 유아교육 구성원 모두가 원하는 미래 유아학교의 모습일 것입니다.

유아교육의 미래는 곧 대한민국의 미래이기도 합니다.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논의와 충분하지 못했던 소통을 이제는 제대로 시작해야 합니다. 정부와 대선 후보들은 유아교육 현장과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한 대선 정책이나 교육과제를 추진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유아교육 현장의 목소리에 귀기울이고, 지속 가능한 미래 교육 발전을 위하여 의무교육으로 이루어지는 미래 유아학교에서의 교육을 실행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야 합니다.

오늘부터 이어지는 연속 토론회에서 깊이 있는 논의들을 통해 우리가 원하는 미래 유아학교로 함께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정토론

조형숙 1 중앙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김은희 1 대유(공영형) 유치원 원장

김오경 1 자연이랑 어린이집 원장

임미령 |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영유아정책자문위원회 위원장

우영혜 1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 회장

이중규 1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회장

박영란 1 한국사립유치원협의회 공동대표

이혜연 1 전국 장애영유아부모회 고문

한국의 지속가능 발전 지향 유아교육 체제 구축을 위한 제언

- 무상교육을 기반으로 한 영유아학교 구축방안으로 -

조형숙 | 중앙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 ◎ 급변하는 총 인구수 및 구조의 변화, 가정의 영유아 양육과 교육에 대한 국가 책임 요구 증대, 기대하는 미래 인재의 역량 변화 등으로 인해 한국의 유아교육 및 보육체제 개편의 요구가 물결처럼 흘러들어옴
- ◎ 앞으로 태어날 영아를 비롯해 이 땅의 영유아는 일당백을 해야 할 소중한 인재임
- ◎ 이 국가적 인재를 낳고 키워내야 할 젊은 부모가 낳고 키우며 현재의 행복과 미래에 대한 긍 정적 전망을 갖게 해줄 수 있어야 지속가능한 사회가 될 것임
- ◎ 즉, 질 높은 영유아교육 체제 구축은 단순히 영유아교육기관의 위한 질 관리 차원을 넘어 가족의 행복과 지속가능 발전 사회를 위한 시급하고도 중요한 국가적 과제가 됨
- ◎ 과거와는 달리 영유아기 심신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던 인적자원 네트워크(부모, 조부모, 마을·공동체, 형제자매 등)가 약화되고 있음
- ◎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과거 정부들은 유아교육/ 보육체제를 구축하고 보완하는 작업 을 지속해옴
- ◎ 그러나 최근 유사한 역할을 담당해온 유아교육기관의 이원화(기관/ 교사양성/ 재정 등)로 인 해 효율성의 저하, 갈등의 지속, 모든 부모, 모든 영유아를 위한 최적의 여건마련에 한계가 있었음
- ◎ 앞으로의 영유아부모는 경제적 여유가 있는 1명 또는 최대 2명 정도의 자녀를 둔 30대 후반 에서 40대가 대세가 될 것으로 전망됨. 이는 자녀양육 및 교육에 대한 기대와 투자심리가 고 조화될 것으로 예상됨

- ◎ 따라서 부모가 국가의 영유아교육체제에 만족하고 행복한 가족생활을 영위하며 소중한 국가 인재를 길러 낼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는 영유아시기 맞춤형 학교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요구됨
- ◎ 이상의 배경과 근거에 기초하여 본 발표자는 미래 유아교육체제로 "영유아학교체제"구축을 제안함
- ◎ 영유아학교체제는 0세에서 2세를 위한 '영아학교', 3-5세를 위한 '유아학교' 체제로 현 유아 교육 및 보육을 통합하는 체제로 재편이 필요함
- ◎ 또한 무상보육 및 교육체제가 뒤따라한다고 봄
- ◎ 쓰나미 처럼 몰려온 저출산 고령화사회에서 일 가정 양립의 큰 과제인 양육과 한국인의 교육 열이 기대하는 양질의 영유아보육 및 교육을 위해 발달상의 차이로 인해 요구가 다른 영아와 유아학교 급을 분리하여 전문화하는 체제가 필요
- ◎ 전문화된 영유아보육 및 교육을 위해 교사양성체계의 재편과 교사대우 등에 대한 발전적 논 의가 요구됨
- ◎ 영유아교사를 젊은이들이 좋은 직업군으로 인식하고 종사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 요구됨
- ◎ 생애최초 사회화과정을 경험하는 영유아가 정서적으로 편안하고 즐거운 교육환경에서 교사 의 전문적 돌봄과 교육을 통해 발달의 민감기를 보낼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직업생활을 편안하 게 하며 가족생활에 만족하는 젊은 세대들이 행복한 생애를 누릴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할 수 있을 것임
- ◎ 영유아교육체제구축이 단순히 영유아만을 위한 것이 아닌 현재 부모세대 뿐 아니라 미래세대에게 자신의 생애를 전망하고 계획하는데 희망적인 메시지를 줄 수 있어야 함

이를 위해 '영아/유아학교체제'구축을 통해 행복기반 미래인재를 양성하고 안심명품 돌봄으로 아이들로 북적이는 나라의 기반을 조성해 가야할 것임

대한민국 미래 유아교육·보육 체제개편을 위한 연속 토론회

김은희 1 대유(공영형) 유치원 원장

다양한 시대별 변화과정을 겪으며 현재에 이르기까지 사랑하는 유아들이 존중받고 균형있게 교육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

유보통합과 무상교육에 대한 정책부분은 그동안 많은 토론의 자리를 거쳐 긍정적으로 논의되어 왔다. 이제는 우리나라가 세계최고의 출산률저하로 인한 인구감소등의 현실적 문제로 무엇보다 먼 저 안정적으로 실현되어져야 하는 정책이다.

서울시교육청의 더불어키움(공영형)유치원은 무상교육의 정책부분을 먼저 시도하고 있다.

잘 준비된 정책으로 펼쳐갈 수 있도록 보다 나은 내일의 교육을 준비하며 이 자리에 함께 토론 자의 자리에 있게 된 것을 감사히 생각한다.

더불어키움(공영형)유치원으로 운영되는 본 유치원은

2017년 1월 서울특별시교육청(조희연교육감) 유아교육과 공영형유치원 모집 공고에 지원, 선정되어 현재까지 더불어키움(공영형)유치원으로 운영되고 있다.

대한민국의 교육이념에 입각(의거)하여 유아교육을 실시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의 설립목적에 따라 설치 운영되고 있다. 사립유치원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 투명성을 강화하여 공영화하는 방안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는 사회적 현상에 2017학년도에 서울특별시교육청의 공영형유치원으로 5년간 유지하여 운영하도록 선정되어 재정지원(교직원 인건비, 유치원운영비, 교육환경개선비 등)이이루어지고 있다.

시간이 지나며 더불어키움(공영형)유치원으로 명칭이 바뀌었으나 미래를 책임질 유아들이 바라보는 미래를 함께 바라보고자 한다.

2019개정누리과정을 반영하여 더불어 함께 자라나는 유아와 교사가 함께 만들어가는 유아·놀이 중심 교육과정을 통해 유아가 중심이 되고 행복하고 건강하게 맘껏 끼를 발산할 수 있고 창의력을 펼쳐갈 수 있으며 놀이가 살아나는 교육과정을 실천하고 있다.

놀이의 현장은 유아들의 삶의 배움터라 또래 유아들이 함께 놀이를 통하여 사회성을 배울 수 있고 유아주도적인 놀이를 통하여 성장하고 있다.

교육과정의 내실화와 융통성이 조화가 이루어지지며 교육과정에 대한 집중도가 높아졌다.

실내·외 교육환경 개선으로 유아들이 안정적으로 생활하며 유아들의 발달에 맞게 잘 정비되어 있어 학부모들의 만족도가 높다.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속에서 유아의 개성과 소질을 존중하며 조화로운 발달을 추구하며 사 랑과 정성으로 책임 있게 교육하고자 한다.

다양하고 풍성하게 잘 짜여진 식단과 급·간식 질 향상 등 유아의 건강·안전을 고려하여 유아들에게 부담이 느껴지지 않는 식사 시간으로 심미적·안정적으로 유치원 급식이 질적·양적으로 개선되었다.

공영형유치원으로 선정되어 운영되고 있는 유치원으로 믿고 안심하고 보낼 수 있다는 학부모들 의 신뢰감이 높다.

사회적 배려계층 우선 모집 및 다양한 학부모교육 실시 등으로 유아놀이중심 교육과정 및 부모역할 등을 교육하여 가정과 유치원이 연계하여 누리과정을 지원할 수 있었다.

지역사회연계를 통해 유아와 학부모에게 필요한 교육과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하였다.

유치원운영위원회 및 각 학부모와의 긴밀한 협력 관계 속에 유치원 교육에 대하여 신뢰하며 함께 유영에 참여하고 있다.

교원 및 직원의 고용 안정화로 책임감 있는 운영을 지속할 수 있다.

교직원들의 자발적인 연수 및 협업등을 통하여 교사의 질이 높아지고 지역사회의 인적자원을 도 움받아 유아들의 개별화교육 지원에도 더욱 힘을 쏟을 수 있었다.

교육과정 및 행정컨설팅을 통한 지속적인 컨설팅을 통하여 유치원 운영의 질을 제고하며 유아·교직원·학부모 모두가 만족하는 유치원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 체계적이며 일관성 있는 전문성 향상의 기회가 되었다.

유아교육의 공공성 확대를 위해 사립유치원의 건학 이념과 특색은 살리되 공공성과 투명성을 더하여 교육력을 제고하고 이를 통해 우리 유아들에게 내일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행복하고 신나는 교육과정을 제공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다.

학부모들은 소득에 상관없이 유아들이 질적으로 우수한 무상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선택할 수 있고, 기관은 선의의 경쟁을 통하여 발전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

1. 서울특별시 더불어키움(공영형)유치원

더불어키움(공영형)유치원은 사립유치원에 재정지원을 통하여 학부모의 유아학비 부담을 경감하고, 운영 법인에 과반수의 개방이사를 선임하도록 하여 사립유치원의 건전하고 투명한 운영을 유도함에 있어 유치원 운영체계를 공립유치원 수준으로 정비하여 사업의 성과를 극대화하고자 함

□ 비젼 및 목표

사립유치원의 학부모 유아학비 부담 경감 및 공공성 증대

□ 배경 및 필요성

- 사립유치원에 대한 인건비 및 누리과정 등 재정지원 확대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학부모의 유 아학비부담 경감 체감도는 낮고, 재정지원에 따른 사립유치원의 공공성 확보, 재정운영의 투 명성 강화에 대한 필요성 증가
- 사립유치원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 투명성을 강화하여 공립에 준하는 수준으로 공영화하는 방 안에 대한 필요성 대두

2. 서울특별시 더불어키움(공영형) 사립유치원 선정기준

□ 대상유치원 자격

- 사인이 운영하지만 법인으로 전환하거나 법인이 운영하는 사립유치원 (건물 소유 이용 형태 자가)
- 사인이 운영하는 유치원은 법인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관련 법령에서 정한 설립요건을 사전에 충족하여야 함

□ 법인전환 및 운영

- 유치원의 법인 형태 및 이사진 임기에 따라 법인과 협의하여 개방이사를 포함하여 구성
- 개방이사는 교육청과 유치원이 협의하여 과반수 이상으로 구성 (현재 법인에 3분의1 이상의 개방이사와 1명의 개방감사를 배치하여 유치원이 투명하고 건전 하게 운영하도록 하는 사립유치원의 혁신 운영 모델로 개방이사와 개방감사는 교육청과 협의 하여 선임)
- 운영기간 3년~5년(유치원과 협의하여 결정)

□ 예산지원항목 및 기준

- 지원항목: 교직원 인건비, 유치원운영비, 교육환경개선비 등
- 유치원의 규모와 현 운영상황을 고려하여 개별 유치원 여건에 따라 탄력적 예산 지원 (유아 수, 학급 수, 교직원 수, 교직원 경력 등 반영)
- 유치원별 총예산액을 각각 산정한 후 누리과정 예산 및 교원 처우개선비 등 지원금을 제외한 사업예산을 지워
- 학부모의 불가피한 수익자 부담경비인 특성화프로그램, 졸업앨범, 통학버스비, 현장학습비 등 최소화하도록 노력함
- 재정지원 수혜로 우수한 교육 환경을 제공하고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힘쓰며 공공성을 강화하여 학부모와 유아는 평등한 교육의 기회를 보장받게 됨
- 사립유치원으로서 책무성을 가지고 교육청과 협력하며 투명한 운영, 쾌적한 교육 환경 제공, 질 높은 교육을 위한 노력을 끊임없이 하고 있으며 정책이 지속성을 가질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함

□ 교직원 임용

- 교육청과 유치원(법인)이 협의하여 공립(단설)수준의 적정 인원을 원장(법인)이 선발(공개채용) 해당 분야 경력과 실무능력을 겸비한 교원 선발
- 서울유아교육 정책과 회계운영의 책무성 및 수용력이 있고 해당 분야 경력과 실무능력을 겸비한 사람으로 직원선발
- 사립유치원 교직원의 안정적인 근무환경 조성됨

□ 교육과정 및 재정회계 운영분야 컨설팅실시

- 교육과정 컨설팅: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에서 주관하여 교육과정 및 방과후과정 등 운영현황에 대하여 매 학기 개시 전 실시 건전하고 내실 있는 운영지원
- 재정회계 운영 분야 컨설팅: 재정 분야에 대하여 매 학기 개시 전 실시
- 교육과정과 유치원 운영에 관한 지속적인 컨설팅을 통해 꾸준한 상호협의가 이루어지며 공공 성을 확보함

□ 정기평가

• 교육청과 교육지원청 담당부서 합동으로 분기별 점검 및 수시평가 결과는 누적관리를 통해 운 영 전반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의하며 결정된 사항은 교육청과 법인이 따라야 함

공영형유치원은 실질적으로 무상교육을 실천하고 있는 사립유치원으로서 유아교육의 사명을 가지고 서울특별시교육청, 법인, 유치원, 학부모, 지역사회가 협력하여 구성원 모두가 사랑과 정성으로 유아들을 교육하기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공적 모델이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참고문헌

- 서울특별시교육청 유아교육과-9325(2020.11.11.)2020년도 더불어키움(공영형)유치원 선정을 위한 공모 안내
- 서울특별시교육청 유아교육과-1554(2017. 3. 2.) 공영형 유치원 선정 운영 안내
- 교육부 보도자료 (2021. 3. 11.) 사립유치원 지원 및 공공성 강화 후속조치 방안 발표
- 박소민, 이주영,이정욱(2020) 육아정책연구 제14권 제1호(2020.6.)27~50 서울시 더불어키움 (공영형)유치원의 현황과 과제

아동의 입장에서 어떠한가요?

김오경 1 자연이랑 어린이집 원장

- ▶ 놀이터에서 놀던 만 4세 유아의 친구의 놀림 "너는 아직도 어린이집 다니냐?"
- ▶ 초등 5학년 아이의 질문에서 "엄마, 나는 왜 유치원 아니고 어린이집 졸업했어?"
- ▶ 만 3세 자녀의 어머니에게서 "아이에게 유치원 졸업장을 주지 못하면 죄책감이 들 것 같아요"
- ▶ "원장님, 간판만 '유치원'으로 바꿀 수 없을까요?"

어린이집을 운영하며 아이들과 부모로부터 듣게 된 일상의 이야기입니다. 위의 상황에서 여러분은 어떤 문제가 보이십니까? '유아교육은 유치원이지' 또는 '어린이집도 잘해'라는 기관 중심의 견지에서 짚어보기 위해 사례를 제안한 것이 아닙니다. 편견이 없는 아이들에게서 이러한 '차별의 시선'은 어디로부터 왔을까요?

전년도 친구였던 아이들이 놀이터에서조차 어린이집 모둠과 유치원 모둠으로 분리되어 놀이하는 모습을 목격합니다. 더 우려스러운 점은 이러한 심리적·물리적 분리현상이 학령기까지 미치고 있다는 점입니다.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아래 이원화된 체제는 제도 및 기관운영의 차이를 만들고, 이는 어린이집에 대한 사회적인 차별적 인식과 함께 아이들의 '계급 의식'마저 조성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아이들의 현실을 심각하게 고민하면서 아이들이 차별 없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토대를 마련했으면 합니다. 누군가의 밥그릇 싸움이 아닌, 각자의 입장은 조금씩 내려놓고 '영유아최우선의 이익'을 고려하여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를 기대합니다. 이러한 취지로 오랜 염원인 '유보통합'을 화영하고 지지하며. [미래 유아교육,보육 체제 개편을 위한 논의]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 □ '유아무상, 의무보육, 유보통합 논의'의 방향성의 기준이 영유아인권이 우선적으로 고려되기를 요청합니다. 보육·교육의 주체인 영유아, 교사, 부모를 중심으로 논의가 이루어지되 그 중심의 우선은 권리 실현의 취약성을 지닌 영유아가 되어야 합니다. 즉, 방향성이 적절한지 아동의 입장에서 이야기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 영유아는 태어날 때부터 누구에게나 부여된 천부적이고 보편적인 권리의 보유자입니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2005년 일반논평 7번을 통해 "초기 유년기의 영유아 권리 이행"을 제2조에서 "모든 영유아는 인종이나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 등에 따른 어떤 종류의 차별 로부터도 보호받아야 한다"라고 비차별의 원칙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12항에서는 "당사국

은 어떠한 형태이든, 어디서 발생하든 간에 가족, 공동체, 학교 및 기타 기관에서의 차별을 감동하고, 이에 맞설 책임이 있다. 유아를 위한 양질의 서비스에의 접근에 있어서의 **잠재적인 차별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보이지 않는 차별에 대해서도 인권 감수성 있게 접근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전년도 친구를 만난 기쁨도 잠시 어린이집 유아라는 이유로 분리되고, 놀림의 시선과 말을 전하는 부모님은 애써 "우리 아이는 대범해서 괜찮지만..." 이었습니다. 유아들에게는 이미 차별이 존재하고 이 불평등은 어른의 편견을 반영한 것임을 생각할 때 유아들의 상황이 가슴 아프게 미안합니다. 단순 편견일지라도 이는 소수 집단에서 혐오와 차별로 확대될 수 있음을 경계해야 합니다(국가인권위원회, 2020). 급격한 발달적 시기에 있는 영유아들이 포용적으로 성장하기 위해 무엇을 먼저 해결해야 하는지 영유아의 입장에서 우선적으로 숙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는 국가인권위원회는(2020)에서 제시한 '혐오 피라미드' 입니다. 그림 속에서 편견이 어떻게 발전되어갈 수 있는지 그 문제의식을 일깨웁니다.



〈그림 1. 혐오 피라미드(국가인권위원회, 2020)〉

- 보육과 교육의 질은 유아들이 생활하는 경험의 질이 될 수 있습니다. 2019 개정누리과정에서는 놀이중심을 더 강화하였듯 영유아의 입장에서 놀 권리는 발달의 근간을 이루는 생명과도 같습니다. 그러데 최근의 유아교육기관의 보육교육과정의 질에 관한 부모님들의인식이 〈그림 2. 맘까페 '특별활동 질문〉처럼 맘까페 검색을 통해 '특별활동=보육·교육의질'이라는 오개념으로 확산되어진다는 점을 엿볼 수 있습니다. 검색 결과물은 쉽게 찾아볼수 있고, 우리 영유아들이 현재 겪고 있는 생활경험의 실태이며 보육·교육의 현 주소입니다. 그 기관의 보육·교육 철학이 어떤지 핵심인 기본과정에 대한 질의는 배제합니다. 오직특별활동의 유형과 가짓수를 챙기며 자유시간을 온전히 누리면서 선택과 결정권을 경험해

야 할 유아들이 나의 의견과 상관없이 '특별활동' 및 '특성화'까지 더하여 시간 단위로 돌려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유아의 '원함(want)'이 영유아들의 권리로써 바로 연결하는 점도 경계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현장에는 영유아들의 온전한 삶을 지켜내기 위해, 철학적 신념으로 영유아권리를 지키기 위해, 오늘도 고군분투하며 부모님들을 설득해내시려는 귀한 분들이 계시다는 것을 압니다. 한국사회의 영유아는 사실상 지나치게 경쟁적인 교육환경으로 내몰리고 있고, 연령도 하향화되고 있어 유엔아동권리위원회(2019)의 '선행학습(진학을 위해 사교육을 받는 것)과 사교육 근절'을 제재조치를 포함하여 권고를 받고 있습니다. 영유아들이 처한 '영유아 권리'에 반하는 이 상황을 그들이 충분히 놀며 자연스러운 배움을 기쁨을 경험하고, 삶의 주인이 될 수 있도록 영유아들이 생활하는 통합적 경험을 가꾸어 주시는 보육·교육인들로 하나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만

7세 월 315000원에 종일반 5만원 차량 3만원 방과후과목은 신청과목마다 상이해요 발레7 매일매일 영어수업있고 체육 골프 해요. 월에한번 숲체험, 코딩, 요리, 인형극, 영양교육등C 하며 보내고있습니다.

2021.06.03. 12:35 답글쓰기



어디

· 말씀하시는걸까요??

2021.06.03. 12:36 답글쓰기

마

〈그림 2. 맘 까페 '특별활동' 관련 질문 : 2021. 9. 27 검색〉

- 그동안 국가적 책임으로 무상교육이 이루어졌으나, 표준보육비 수준에 미치지 못하여 고 정지출(인건비, 시설운영비) 비중이 커지면서 보육의 질 마련을 위한 충분한 재원이 부족 한 실정이었습니다. 여기에 저출생 현상은 보육료 수입의 감소로 이어져 재정적으로 더 어 려운 시설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표준유아교육비 수준'의 무상교육비가 실현되어 영유아들이 경험하는 질의 격차 해소도 해결되기를 기대합니다.
- 현재 유아교육기관에는 만 3~5세 대상의 유아들로 구성되어 있으나, 어린이집은 0~만 2세의 영아들이 기관을 다니고 있습니다. 영유아들은 교육의 다양성 속에서도 연계성 있게 승급될 때 발달적 안정감이 지속될 수 있습니다. 일과 운영의 방식이나 특성화 및 특별활동까지 운영하는 기관에서 오게 되는 영아도 있습니다. 새로운 시설을 입소할 때 운영방식과 보육철학에 대한 차이로 인해 갈등이 빚어지기도 하며, 부모와 기관이 협력을 이루는데 더 많은 수고가 협력이 필요하며 때로는 퇴소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유아교육·보육 체제 개편 논의 단계에 영아를 포함하여 설계하여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 □ '유아학교'의 정체성을 좀 더 명확히 하여 상향 평준화의 의미인지 가릴 필요가 있습니다.
 - 발제자께서는 유아교육을 바라보는 시각에 대해 유아교육이 '교육'으로 인정받지 못하며, 돌봄과 보육의 연장선에 놓인 현실을 문제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019 개정 누리과정'에 서는 교육과정을 '유아가 경험하는 총체'로써 교사와 유아가 함께 만들어가는 교육과정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유아가 경험하는 총체'는 '유아의 삶'이 되며, 권리의 주체자로서 권리 실현의 취약함이 있는 영아를 포함한 유아의 삶은 교육과 보호가 분리하여 바라볼 수 없습니다.
 - 어린이집은 망원동 화재사건을 계기로 '보호'의 중요성으로 시작되었지만, 현재는 교육과 보호의 측면에서 영유아의 보육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또한 유치원도 최근에는 교육과 더 불어 유아의 보호적 지원(돌봄 교실 등)을 함께 제공하는 변화의 흐름에 있습니다.
 - 동일연령의 유아가 동일수준에서 경험하는 '평등'의 가치가 실현되도록 보육과 유아교육은 각 영역에서 노력하여왔던 점을 인정하고, 서로의 강점을 상호보완적으로 협력해 나가기 를 기대합니다.
 - 따라서, '유아학교'의 의미는 그동안의 학력화된 '학교' 시스템의 의미가 아닌, 교육의 다양성, 뇌발달 및 유아의 발달성을 반영한 통합된 놀이와 생활을 중심으로 하는 '재개념화된 학교'이기를 제안합니다.
- □ 국가의 사회적 양육의 책임의 공공성은 높이지만 공공의 영역으로만 여기면 영유아는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속해 가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1차적 양육의 책임은 가정에 있으며, 영유아가 가족 안에서 관계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스템, 즉 상호책임 문화로 조성되어 져야 합니다.

앞에서 [미래 유아교육,보육 체제 개편을 위한 논의]를 여러 지점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저의 논의 중 가장 시급히, 우선적으로 해결되었으면 하는 과제는 유아들 안에 현재 존재하고 있는 '차별'의 제거입니다. 덧붙임이 없는 현실입니다. 유아들이 차별 없는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이야기를 들으신 모든 분께 적극적인 마음과 실천적 행동으로 동참해주시기를 간절히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참고 문헌

황옥경, 정연아, 송미령, 명준희(2019). 어린이집 이용 부모의 역할책임에 대한 부모 인식과 실제 차이. 63-88. 한국보육지원학회.

국가인권위원회(2020). 혐오표현 리포트.

유엔아동권리위원회(2005). 일반논평 7 초기유년기에서의 아동기의 이행. 유엔 아동권리위원회. 보건복지부, 국제아동인권센터(2020). 대한민국 5-6차 국가보고서에 대한 아동권리위원회 최종 견해.

미래 유아교육 체제 개편에 대한 토론

임미령 1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영유아정책자문위원회 위원장

"이 세상에서 지식은 힘이고, 교육은 힘을 줍니다.

교육은 역동적인 발달을 이끄는 필수불가결한 요소입니다.

교육은 경제적인 것을 훨씬 뛰어 넘어, 사람들이 자신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게 힘을 키워주는 내적 가치를 지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육받을 기회가 인류 발전에 있어서 가장 우선시되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헬렌 클라크 유엔개발계획 사무총장

토론에 들어가며.....

※ 본 토론문은 영유아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 전반의 복합적인 요소들이 아닌, 영유아 단계의 국가 정책만으로 범위를 좁혀서 작성하였습니다.

오늘날 민주주의 사회의 정책 결정은 공론화와 거버넌스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아교육·보육 정책은 당사자인 영유아, 부모, 현장을 소외 시키고 정치적 판단만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았고 그러다보니 현장과는 거리가 먼 정책들이 나오기도 하고, 정책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바람직한 정책이란, 다양한 사회구성원들의 참여를 통해 함께 의견을 나누고 정책이 추구하는 방향에 공감하고 연대하는 과정을 통해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6차에 걸쳐 이루어지는 토론회 및 집담회를 통해 그동안 우리가 안고 있었던 과제들을 모두 해결할 수 있는 결론에 도달 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러나 부모, 현장, 학계, 그리고 시민 단체가 함께 문제를 제기하고 해결하기 위해 머리를 맞대는 것은, 남북 통일보다 유보통합이 어렵다며 손사래를 쳐온 정치권과 관료들에게 분명히 큰 도전이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 과정에 참여하고 지켜보는 시간을 통해 우리 모두는 많은 것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민주주의는 우리에게 동의하지 않을 권리를 부여했고, 갈등의 에너지가 사회변화를 위한 긍정적 에너지로 전환되도록 고안된 사회적 장치입니다. 저는 오늘의 토론을 통해 서로의 신념이나 입장 의 차이를 돌처럼 던지는 대신, 갈등의 근원을 서로 나누게 된다면 서로를 연결하는 통로를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상대의 이야기에 마음을 열고 귀를 기울이다 보면 미처 예기치 못했던 서로 의 연결 고리를 찾기도 하고 유대감이 생기기도 할 것입니다.

우리는 영유아들과 함께 지내며 매일 비슷한 경험을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비슷한 경험을 하고 있음에도 우리가 몸 담고 있는 구조 속에서 정책적 모순이 누적되어 상반된 주장으로 나타 났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면 우리는 서로의 차이를 존중할 수 있고 절충과 합의를 통해 아이들을 위해 밝은 미래를 열어주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영유아들의 인격권에 대한 사회적 인식, 우리가 하는 일에 대한 사회의 인정 정도 나아가 교육`보육 정책의 수립과 이행과정에서 영유아들이 소외되는 것에 대한 오래된 '비통함'을 공통의 분모로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정치인과 관료들이 우리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영유아들을 위해 최선의 교육복지 정책이 무엇인지를 고민하는 혁신적 마인드를 갖도록 촉구하는 것입니다.

유아교육·보육의 개혁을 성공적으로 이룬 나라들에는 '영유아 중심의 관점'을 가지고 개혁을 이루는 것이 '아이들의 행복과 정의로운 사회'를 만든다는 신념과 열정을 가진 정치가와 행정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위해 기꺼이 서로의 차이를 넘어 성숙된 모습으로 합의를 이끌어 내는 구성원들의 인내심이 견인차의 역할을 했습니다. 오늘 이 토론회가 우리가 안고 있는 갈등의 에너지를 창조적으로 전화시키는 공론의 시작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제1 발제: 미래 교육'보육 체제 개편에 관하여

먼저 제1 발제 중 첫 번째 주제인 미래유아교육`보육 체제 개편에 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발제 자가 발표하신 내용들의 중요성에 동의하며, 미래유아교육·보육 체제 개편과 관련하여 우리 사회가 함께 공유해야 하는 몇가지 전제들에 관해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미래유아교육·보육 체제 전환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는 개혁의 관점을 명확하게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즉 체제 전환이 어느 방향으로 가야할 것인지 고민하며 지금 펼쳐지고 있는 현상을 들여다보되, 가치 판단의 기준은 미래에 두어야 합니다. 미래에 가치 판단 기준을 둔다는 것은 곧 미래 세대인 영유아들의 관점에서 체제 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미 유럽 연맹의 각국들은 대부분 0-5세 유아를 교육부로 일원화하는 체제 개혁을 이루었으며, 기존의 '가족복지'관점을 바탕으로 사회복지 관련 부처에서 유아교육·보육을 관리하던 일부 국가들도, 정책적 판단의 축을 옮겨서 평생학습을 위한 '교육복지'의 관점을 가지고 교육부로 영유아들을 일원화하는 개혁을 시행했습니다.

〈표1: 국가별 유보 통합 담당부처 및 대상 연령〉

국가	통합여부	담당부처	통합연도	대상연령
뉴질랜드	0	교육부	1986	0-5세
스웨덴	0	교육부	1996	0-6세
영국	0	교육부	1998	0-4세
노르웨이	0	교육부	2005	0-6세
덴마크	0	교육부	2011	0-6세
핀란드	0	교육문화부	2013	0-6세

[※] 이밖의 통합굮가: 아이슬랜드, 스페인,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프랑스, 영국 등

이런 점들에 근거할 때 한국 미래 유아교육·보육 체제는 "교육은 모든 사람의 기본적인 권리이며 동시에 다른 권리의 보장을 촉진하는 원동력."이라는 철학을 가지고 접근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교육은 공공선이므로 국가는 0세부터 시작되는 모든 교육의 단계에서 질 높은 교육권을 보장할 의무를 갖는다."는 평생학습의 관점과 '권리기반 접근'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이러한 인본주의적 관점을 바탕으로 "모든 국가는 포용적이고 공평한 양질의 교육에 대한 보편적이고 평등한 접근을 보장해야한다."는 "교육 2030 SDG4"의 원칙을 반영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미래 영유아교육·보육 체제는 평생학습의 관점에서 "모든 영유아들의 교육권 및 제반 기본권을 보장한다."는 방향성에 입각하여 "어떤 유아도 소외되지 않는 포용적인 교육 정책"을 수립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 참고: SDG 4.2(지속가능발전교육 2030 세부 목표 4.2)

2015년 UN은 2030년까지 전 세계가 원하는 미래를 만들기 위해 환경, 위생, 복지, 평화, 교육 등을 포함하여 17개의 목표를 설정하였다. 4번째 목표에 해당하는 교육은 7개의 하위 목표와 3개의 실행 목표를 가지는데, 유아교육은 7개의 하위 목표 가운데 2번째에 해당하며(SDG 4.2), 2개의 국제 지표와 3개의 주제 지표를 ... 가지고 있다.

■ 세부 목표 4.2: 2030년까지 모든 여이와 남아가 양질의 영유아 발달, 교육, 보육 및 취한전 교육에 대한 접근을 보장하여, 이들이 초등교육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한다.

35. 출생부터 시작되는 영유아교육과 보육은 아동의 장기적 발달, 행복, 건강의 기초가 된다. 영유아 교육과 보육은 인간이 생애에 걸쳐 학습하고 생계를 꾸리는데 필요한 역량과 기술을 길러준다. 어린 아동 특히 소외 집단의 아동들에 대한 투자는 발달 및 교육 성과와 관련하여 가장 큰 장기적 파급력을 갖는다. 또한 영유아교 육과 보육은 장애 아동 및 장애 위험 아동에 대한 조기 진단을 가능하게 하여 부모, 보건의료제공자, 교육자 들이 장애 아동들의 필요에 대한 시의적절한 개입을 보다 잘 계획, 개발, 실행하게 함으로써 아동의 발달 지 연을 최소화하고 학습 성과와 포용성을 개선하며 소외를 예방한다. - 하략 -

36. 영유아 교육과 보육은 적합한 보건과 영양, 가정, 공동체, 학교 환경에서이 자극, 폭력으로부터의 보호, 인지적'사회적'정서적'신체적 발달에 대한 관심을 포함한다. 생애 초기 몇 년 동안에 대부분의 주요 뇌 발달이 이뤄지고, 아동은 자신과 주변 세계에 대한 집중적 의미를 형성하여, 건강하고 남을 배려하며 역량 있고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시민으로서의 기초를 수립한다.

영유아보육과 교육은 아동의 행복과 초등학교 입학을 위한 점진적인 준비를 도와주는데, 초등학교 입학은 아동의 배움과 능력에 대한 보다 많은 기대가 동반된 중요한 전환점이 된다. '초등학교 입학 준비'란 적합한 건강 및 영양 상태, 연령에 맞는 언어적, 인지적, 사회적, 정서적 발달을 포함하여 다양한 영역에 걸쳐 중요한 발달 단계에 도달했음을 의미한다. 이를 위해 모든 연령의 아동이 양질의 종합적인 조기 유아 발달. 보육, 교육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 하략 -....

둘째, 'ECEC(유아교육·보육)'라는 용어는 이미 국제 사회에서 합의된 보편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용어라는 점입니다. 이 용어는 이 시기 아이들을 위한 모든 의사결정에 있어 확고한 가치를 담고 있습니다. 즉 "영유아기 단계에서는 이 시기의 발달 특성으로 인해 '한 아이'에게 '교육과 보육 (ECEC)'을 통합된 방식으로 제공해야한다."는 명제를 담고 있고, 이러한 명제는 이미 각국에서 영유아들을 위한 정책 판단의 준거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준거로 한국의 유아교육`보육을 돌아볼 때 우리가 얻는 교훈은 너무나 자명할 것입니다.

* 참고로 'ECEC(Earlychildhood educaton & educare)' 즉 '유아교육·보육'이라는 우리 말 번역의 의미는 '영아기'를 포함한 개념입니다. 학문적으로도 유아교육의 대상이 0-8세라는 것은 기정 사실입니다.

이런 점 때문에 유아교육·보육을 '돌봄'이라는 용어로 대체해서 사용하거나, 유아교육·보육 정책을 '돌봄' 정책으로 전환하려는 국가 정책은 국제적 추세를 거스르는 것이며! 학문적으로도 잘못되었고! 무엇보다도 영유아들의 교육권을 훼손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한편으로는 유아교육·보육계 내부에서 부지불식 중에 이런 잘못된 용어를 사용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말 사전이나 영어의 사전적 의미로 볼 때도 '돌봄(caring)'이라는 용어는 영유아를 주체로 보기 보다는 무의식적으로 '타자화'할 수 있는 우려가 있습니다. 사용하는 언어에 따라 인간의 사고가 달라질 수 있다는 '언어 상대성 이론'과 '영유아 존중의 관점'을 고려할때 '돌봄'이라는 용어는 적소에만 사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국제 사회의 영유아교육`보육 정책 관련 발간물의 번역에서도 'educare'라는 용어는 '돌봄' 또는 '교육돌봄' 등과 같이 잘못 번역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경우 발간물의 내용을 이해하고 활용하는데 혼선이 일어날 수 있으므로 법적으로 규정된 '보육'이라는 용어를 일관성 있게 사용해야 합니다.

※ '돌봄'용어 사용 예시

※ 참고: 유아교육법 제2조의 6 "방과후 과정"이란 제13조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 이후에 이루어지는 그 밖의 교육활동과 <mark>돌봄활동</mark>을 말한다. 아울러 인본주의적 관점에서 볼 때, 어떤 아이는 돌봄만이 필요하고 또 어떤 아이는 교육만이 필요한 경우가 존재하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이 시기의 발달이 갖는 전 생애 발달의 기초성, 통합 성, 연속성이라는 원리 때문에 모든 영유아들은 반드시 교육과 보육이 통합된 질 높은 경험을 제공 받아야 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자면 미래 유아교육·보육 체제로의 전환은 첫째, 영유아들의 권리를 기반으로 하는 관점에서 영유아들의 최선의 이익을 고려해야 하며 둘째, 교육과 보육은 통합된 방식으로 제공해야 하고 셋째, "모든 영유아들의 질적인 배움과 건강한 성장을 보장하는 공평하고 포용적인 교육 체제"가 되어야 합니다!

제2 발제: 우리가 원하는 미래 유아 학교

먼저, 발제자가 "유아교육 없는 유아교육 정책"이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언급하신 정치권의 유아교육 정책에 있어 '유아교육'을 '교육'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부족하다는 점, 그리고 교육 주체인유아, 학부모, 교사의 의견이 반영되고 있지 않다는 문제 의식에 대해 적극적으로 공감합니다. 영유아기가 각 개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측면과 사회 발전을 위한 교육 투자의 가장 효과적인 시점임에도 그동안 모든 교육 정책의 후순위로 내몰린 것은, 이 시기를 교육의 단계로 보지 않고 유아들을 권리의 주체로 보지 않으며 단순한 돌봄의 대상으로 보는 시각이 여전히 만연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많은 교사들이 여러분의 제자인 영유아들의 권리 보장과 삶의 질 향상을위해 포용적인 교육 마인드를 가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통해 한국의 유아 교육과 보육 정책을 끌어 갈 수 있는 공동의 연구를 실천하고 영유아를 위한 정책 개발과 이행의 과정에 거버넌스로 참여하여 영유아들의 권리 옹호를 위한 대변인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다음으로 "인구 감소로 인해 변화가 요구되는 유아교육 현장"이라는 주제에 관한 논의에서, 급격한 출생아수 감소로 인한 유아교육 체제 개편의 필요성을 주장한 것은 현재 이 자리에 있는 모두의 공통적인 관심사라고 생각합니다. 박창현 연구원의 발제에서도 언급되었다시피 아이들이 없는 교실은 존재하기 어려운 거죠. 교육부는 이런 추세로 인해 학교 통폐합이나 교사 정원 축소와 같은 해결책들을 고려하고 있지만 어떤 면에서 이런 위기 상황은 그동안 우리가 꿈꾸어왔던 질 높은 미래 유아학교를 만들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적으로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모두 교사 대 영유아 비율을 줄여 질적 관계 형성의 전기를 마련하고, 학급 운영에 있어서도 협력팀으로 일하는 것과 같은 정책 개선을 촉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덧붙여 한국 사회가 인구 절벽 현상을 목전에 두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교육 대상 연령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 교사들의 숙의가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유치원에 만3세가 취원하게 된것은 1992년부터입니다. 또한 하루 3시간 운영이라는 원칙 또한 맞벌이 부모들이 증가하면서 다양한 시간의 형태로 변화하게 되었지요.

"사회는 계속적으로 변화하는 유기체입니다," 우린 지금껏 인류가 한번도 겪어보지 못했던 변화의 조류가 시작되는 변곡점에 서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논의하고 있는 미래유아교육·보육 체제의전환은 바로 그런 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것입니다. 기존의 관행과 고정관념을 넘어서 우리 모두의아이들과 함께 지속가능한 미래를 향해 BTS가 언급한 "웰컴"이라는 긍정의 메시지를 던질 수 있는 교사들의 집단 지성이 지혜롭게 발휘되기를 기대합니다.

토론을 마치며

마지막으로 국가가 유아교육·보육을 이원화된 체제로 방치하며 양질의 교육적 개입을 하지 않을 경우 시설간 취원률 경쟁과 교육공백으로 발생하는 선행학습 및 사교육의 문제점들에 관해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모든 단계의 학교가 입시 전쟁을 치루는 공간이 되어 버리면서, 그 시작점이 이미 영유아기 단계로 내려온지 오래입니다.

영유아 대상 사교육에 있어서도 '부익부빈익빈' 현상이 일어납니다. 대표적인 실태를 살펴보면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강남구의 한 영어 학원은 월 224만원의 수강료를 받고 있으며 연간 학부모가 부담해야 하는 학원비는 약 2,692만 원으로 대학 등록금의 무려 4배에 달하고 일평균 9시간 27분(567분)의 교습이 이루어지는 곳도 있습니다.

이런 사교육의 가장 큰 문제는 영유아들의 건강권과 발달권을 침해한다는 점과 더불어 엄청난 사교육비의 격차가 아이들의 학력 격차로 연결되며 부모의 능력에 의한 불평등이 대물림되고 있다 는 점입니다.

한편으로 우리 나라 부모들의 경우 사회 경제적 지위와 상관 없이 자녀 교육을 위해 모든 것을 다 쏟아붓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무상교육을 실행해도 부모들의 체감 효과가 낮고 사교육비에 대한 부담이 여전하기 때문에 출생률이 올라가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아이들은 제 때 길러야할 것들을 놓치게 될뿐만 아니라 학업스트레스로 인한 사회 정서적 발달의 문제가 유치원과 어린이 집에서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정책의 용이성이나 어른들의 편의와 이해관계에 따라 영유아교육과 보육을 분리하고 양질의 교육적 개입을 방치하는 현재와 같은 상황은, 영유아들이 삶을 향한 여정을 시작하기도 전에 불평등을 강요당하고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위협 당하는, 억압적인 구조라는 점입니다. 오늘날 많은 경제학자, 발달 심리학자, 뇌과학자들이 "영유아 시기에 벌어진 발달의 격차를 이후의 단계에서 조정하는 것이 쉽지 않다."라고 한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토론이 끝나면 각자가 속한 영역에서 우리가 꿈꾸는 유아 학교는 어떤 모습인지 모습을 그려보고 숙의합시다! 그리고 2차 토론회를 통해 우리가 원하는 유아 학교는 어떠해야 하는지 차기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분들에게 알려주기로 합시다!

유아교육은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

우영혜 1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 회장

유아들은 국가의 미래이며, 유아교육이 잘 이루어져야 국가가 성장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교육열은 세계 최고 수준이지만 생애교육의 첫 출발점인 유아교육은 OECD 국가의 대열에 서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우리나라 유아교육보육의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두 분의 주제발표 의견에 동의하며 본인의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1. 유아학교와 유아교육보육 체제 개편

광복 50주년을 맞은 1995년 국민학교를 초등학교로 명칭 변경했으나, 유치원 명칭은 지금까지 그대로입니다. 현행 교육기본법 제9조와 유아교육법 제2조는 유치원을 '학교'로 분명히 명시하고 있으면서도 나머지 법 조항들은 '유치원'으로 명기하고 있습니다.

한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는 한국교총과 함께 초·중·고·대 '학교' 체제와 명칭의 통일성, 연계성을 기하기 위해서 '유아학교' 명칭 변경을 현장 숙원 과제로 추진해왔습니다. 지난 2002년 유아교육 발전방안 건의서를 통해 유아학교 명칭 변경을 요구한 이래 지금까지, 교육부와 교섭·합의, 국회 청원 서명 및 청와대 국민청원 등 20년 가까이 지속적인 활동을 전개해왔습니다. 그런데 왜우리의 염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을까요? 명칭 변경을 반대하고 있는 일부 의견이 있으나, 이제는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유아학교 명칭 변경을 위한 유아교육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유아교육을 전공하고 이 분야에 종사하는 경우 유치원, 어린이집을 구분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법체계, 관할청, 대상 연령, 교사자격, 운영실태 등을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입학설명회에서 학부모에게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대한 차이를 알려주지만 학부모들은 가끔 유치원을 어린이집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두 기관의 다름을 설명 하지만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대상 연령은 동일한데, 공사립유치원, 다양한 종류의 어린이집을 학부모들은 굳이 구분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가 미래 교육 체제를 갖추기 위해서는, 유아학교 명칭을 변경하고 유아교육보육을 교육 부로 통합해야 합니다. 선진국들의 예를 보면, 보육보다는 유아교육에 투자를 한 국가의 출산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아교육을 중점적으로 지원하는 스웨덴과 프랑스가 보육에 주력한 독일이나 오스트리아보다 출산율이 더 높습니다. 유아교육보육이 일원화가 되면 교육과정, 기관운 영, 교사 역량 강화 등 유아교육의 질 관리, 학교 체제하에서 정체성 강화, 공교육으로서의 기반을 확보하게 될 것입니다.

2. 유아 무상교육과 완전무상교육

현재 무상교육이 실시되고 있는 유아교육 기관을 살펴보면 유치원과 어린이집, 시·도 지역, 도 시·농촌에 따라 학부모가 부담하는 유아교육 비용은 차이가 있습니다. 국가에서 지원하는 유아교육비(방과후과정비 포함)는 유아 1인당 공립 월 13만원, 사립과 어린이집은 33만원이며, 교사 처우개선비가 매월 지급되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지원하는 유아교육비 외에 지자체와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급식비, 학급운영비, 기관운영비 등이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현재 학부모가 부담하는 교육비가 거의 없는 곳도 있고, 또한 같은 지역에서도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실정에 따라서 학부모 부담 유아 교육비가 있는 기관도 있습니다. 유아의 교육을 위한 경비를 국가나 지자체 경비로지원받고 추가로 지불하지 않는 학부모는 이미 유아 완전무상교육의 혜택을 받고 있는 셈입니다. 박창현 연구팀장의 유아 의무교육 및 무상교육보육의 쟁점과 과제연구 결과에 의하면, 완전무상교육에 대해 유아교육계와 보육계에서 강한 찬성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완전무상교육이 되겠지요. 그러면, 완전무상교육을 위한 표준유아교육비는 얼마나 될까요? 또 표준유아교육비에는 어떤 비용을 포함해야 할까요? 표준유아교육비가 정해지면 모든 유아교육 기관의 학부모 부담액이 전혀 없을까요? 표준유아교육비도 중요하지만 우선적으로 교사 처우개선비를 추가 지원하는 것이 교사의 질을 높이면서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재정을 지원하고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3. 유아 의무교육

교육의 중요성과 더불어 유아교육에 대한 투자는 국가적 측면에서 미래의 불투명성을 해소하는 선투자라고 하였습니다. 유아 의무교육에 대한 박창현 연구팀장의 주제 발표에 적극 동의하며, 우 리나라도 의무교육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프랑스는 사회 양극화를 해소하고 동등한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며,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정책 중 하나로 공립유치원을 99% 확대하여 2019년부터는 3세까지 유아 의무교육을 시작하고, 자녀수에 따라 가족수당을 지급하여 1990년대 중반 1.6까지 떨어진 출산율을 2.0까지 회복했습니다. 유럽 다수의 국가들과 OECD 국가들의 유아 의무교육을 보면 우리나라도 당장 시행해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들고 너무 뒤처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먼저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있습

니다. 앞서 언급했지만 먼저 유아교육보육이 교육부로 통합되고, 박창현 연구팀장의 미래 유아교육보육체제 개편의 방향: 가능한 가안과 같이 국공립유치원 이용률이 80% 이상일 때 만 5세부터 단계적으로 의무교육을 한다는 안을 지지합니다. 또한 유아 의무교육은 사립유치원이 법인화가 되어 유·초·중·고·대학교와 같이 학교 체제하에서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많은 국가들이 유아교육의 국가적 책임과 공공성을 강화하고 있으며, 학부모 부담을 줄여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저출산은 현재 국가의 필수 해결 과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특히 유아교육 분야 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을 인지해야 합니다.

오늘 논의된 유아학교 명칭 변경, 유·보 체제 정비, 유아 완전무상교육이 차기 정부에서는 꼭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라며, 이번에 기획한 연속 토론회가 우리나라 유아교육이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미래 유아교육·보육 체제 개편을 위한 토론문

이중규 |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회장

먼저 우리 미래의 주역인 영유아들의 교육·보육 체제 개편을 위한 내용으로 함께 토론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신 육아정책연구소의 여러분들과 연구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우리나라 영·유아 보육은 오랜 역사에도 불구하고 유아교육과의 분화와 통합에 대한 논의만 반복되고 있다. 미래의 주역인 우리 아이들을 일관된 방향으로 견고히 이끌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로 이원화되어 운영되며 벌어진 격차로 인해 평등한 출발선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국가 수준의 공통 교육과정인 '누리과정'이 운영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격차 해소 통해 진정한 통합을 보장하고, 미래를 위한 유아교육·보육 체제 개편의 구체적인 시스템이 구축될 필요성이 있다. 그러한 가운데 이번 토론이 유보통합을 위한 발걸음을 다시 내딛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리라 생각한다.

본 토론자는 발제자의 내용을 바탕으로 미래 유아교육·보육 체제 개편을 위한 준비에서 유보통합을 중심으로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한다.

첫째. 초저출산국의 현실에서 더 이상 이원화되어 운영되는 것은 의미가 없다.

우리나라의 출산율 저하와 함께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재원아동 수 감소가 지속되고 있는 것은 대부분 공감하는 사실이다. 이와 함께 발제자의 자료를 보면 "유치원의 경우, 2026년에는 2020년 유치원 학급수 36,634개의 88.7%인 32,500개 학급을 초등학생 수 감소로 인한 초등학교 유휴교실로 충당 가능한 수준"임을 밝혔다. 저출산 심화로 인해 영유아 수 감소에 이어 학령인구의 감소도 본격적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이러한 현실에서 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나누어 운영하는 것이무슨 의미가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드는 게 사실이다. 발제자의 주장과 같이 유아교육과 보육의 공공성 강화와 양질의 교육·보육 수준의 질적 제고를 위해서는 유아교육과 보육이 하나로 통합하여체계화된 제도를 갖춘 후 적재적소의 재정지원을 받아 영유아를 올바르게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0~2세에 해당하는 영아기 보육·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들에 대한 교육 체제도 함께 확립해야 한다.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2020년 보육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0~2세 중 70%인 700,800명이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다. 이처럼 많은 영아가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는 현시대에서 영아기아동의 발달에 맞는 양질의 교육과 보육을 제공하는 것은 국가 차원의 중요사안이며, 이는 영아기교육을 강조하는 국제추세에도 부합되는 방향이다. 이미 유네스코에서도 2011년 'ISCED(국제표 준교육분류)'를 개정하면서 취학 전 교육을 2단계로 세분화하여 「0~2세 영아의 교육적 발달단계와 3세~취학 전까지의 유아교육 단계」로 정리하여 영아교육의 비중과 중요성을 명확히 한 바가 있다.

0~2세 영아기는 신체적, 심리적 성장과 변화가 가장 급격하게 이루어지는 시기로서 생애 초기의 발달적 경향성이 이후 발달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만큼 전문적인 보육·교육지원이 필요하며, 다른 어떤 연령보다 신중한 교육적 접근이 요구된다. 영아를 지도하는 교사들은 유아교사와 달리 섭식, 수면, 배변 등 기본적인 일상생활에 대한 교육적 방안을 수립하여 지도해야 하며, 영아를 교육할 때는 영아와의 밀접한 관계 형성을 통한 영아 주도의 학습을 기반으로 세심하게 관찰하고 보살 피며 교육적으로 배려해야 한다. 이러한 영아교육의 질은 교사의 전문성에 달려있으며, 영아의 민 감한 발달 특성을 고려해 학습과 발달을 이끌어 줄 수 있는 전문적 역할을 수행해야 하므로 다른 연령에 비해 더욱더 전문성이 요구된다.

즉, 영아교사는 단순히 영아를 돌보는 사람이 아닌 개별 영아의 특성과 발달에 맞는 전문적인 교육을 계획하고 실행하는 전문가인 것이다. 유보통합의 과정에서도 이러한 영아의 발달적, 교육적 특수성에 기초하여 질 높은 교육을 수행하는 전문적인 교사 역할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발제자의 자료에서 볼 수 있듯이 유보통합 시 담당 부처에 대해 교육부가 적절하다는 의견이 다수로 나타났다. 이는 단순히 유아교육에 보육이 편승하거나 흡수되겠다는 의미가 아닌 0~2세 영아기 역시 교육이 중요하며, 0~5세 전체 영유아에 대한 교육체계가 일관되게 확립되어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따라서 영아기 교육에 대한 국가적 관심 확대와 0~5세까지의 전체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교육·보육 체제 개편이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공통의 교육과정을 도입할 때는 공통의 지원이 선행되어야 한다.

누리과정을 도입하면서 국가는 한시적으로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을 도입하여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동일하게 누리과정 보육료를 책정·지원하고 있다고 하지만, 실제 기관에 지원되는 지원액은 대단히 큰 격차가 존재한다. 동일한 금액의 보육료를 책정하고 어린이집만 보육료에 급·간식비를 포함함으로 인해 실제 유아들의 교육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교육비에서 격차가 생기고, 누리과정 학급 운영을 위한 지원비 역시 차이를 보인다.

교육을 지원할 수 있는 비용에서 격차를 두고 지원하면서 어린이집에 높은 수준의 보육서비스와 유치원과 동등한 수준의 교육과정을 운영하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현장의 어린이집에서는 유치원보다 적은 금액의 지원금을 가지고 더 많은 시간 동안 아이들과 생활하면서 최상의 교육·보육을

제공해야 하며, 그에 대한 평가도 꼼꼼히 받아야 한다. 이러한 어린이집의 일방적인 희생은 보육교 직원의 소진을 유발하고, 이는 영유아에게 쏟아야 할 에너지에서조차 유치원과 격차를 만들게 되 는 것이다.

간혹 유보통합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는 의견 중 교사의 전문성에 대해 언급하는 경우가 있는데,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금, 보육·교육 시간, 근무 환경 등 동일한 환경이 이루어진 후 보육 서비스 및 전문성에 대한 비교가 되어야 올바른 비교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전문성과 특수성을 인정하며 개편이 이루어져야 한다.

오랜 기간 어린이집과 유치원으로 나누어져 운영되면서 가지고 있는 각각의 장점을 충분히 살리는 가운데 통합의 개념과 가치, 방향성을 정립해 나가야 할 것이다.

어린이집과 유치원 어느 한 곳을 기준으로 다른 쪽에서 맞추는 것이 아닌 각각의 전문성과 특수성을 인정하여 진정한 통합적 개편이 되어야 한다. 어린이집 교사도 교육과정에서 부족한 부분은 재교육에 참여하고, 유치원 교사에게도 영아교육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한 전문성 증진을 위한 다양한 교육에 참여하여 0~5세를 대상으로 하는 미래 유아교육·보육의 의미를 되새기며 교사로서 기본자질을 기르고 대상 연령층의 다양성을 이해함으로써 보다 전문적인 교사 역할을 수행할 수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미래사회를 주도할 인적자원인 영유아를 위해 적극적으로 모색하던 유보통합 논의는 유아교육과 보육의 갈등과 격차만을 남겨놓은 채 멈춰있다. 올바른 방향이 제시되지 않는다면 갈등과 격차는 언 제든지 되풀이될 수 있으며, 그로 인한 양육 부담과 출산율 감소 등 국가적 문제는 심화될 것이다.

초저출산국이 되어버린 위기 상황에서 유아교육과 보육의 통합을 빠르게 추진하고, 격차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정부와 국회의 일방적인 정책 결정만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 영유아 교육에 대한 정체성 확립, 다양성과 특수성이 인정되는 교육문화의 형성, 차별 없는 지원이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영유아와 그 부모들이 유치원과 어린이집이라는 이름이 아닌 각각의 상황과 특성에 맞는 어느 기관을 선택하더라도 동등하고 평등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는 체제 개편을 이룰 수 있기 를 기대한다.

대한민국 유아교육의 미래를 위한 제안

박영란 1 (사)한국사립유치원협의회 공동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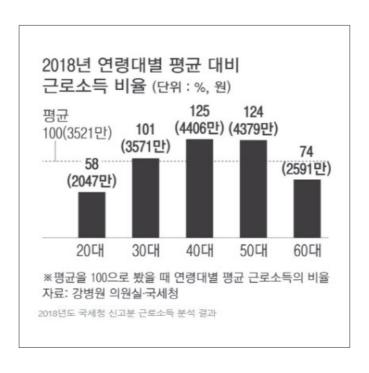
1. 저출산의 늪에 빠진 대한민국

올해 통계청의 '2020년 출생 통계(확정)'에 따르면 지난해 출생아 수는 272,300명으로 집계됐다. 302,600명을 기록했던 2019년보다 30,300명(10%)이 줄어 역대 최저치를 기록한 것이다. 합계출산율은 0.84명으로 OECD 38개 회원국 중 가장 낮았다. 이제 합계출산율이 1명 미만인 국가는 한국밖에 없다. 특히 서울의 경우 합계출산율이 0.64명으로 전국 최하위다.

이렇듯 초저출산이 이어지는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 하나에는 교육비에 대한 부담 도 있을 것이다.

작년부터 고등학교의 무상교육이 시대가 열렸다. 당연히 반겨야 할 일이지만 여기서 조금 생각해 보아야 할 점이 있다.

고등학생을 둔 부모와 유치원 입학을 앞둔 부모와의 단순 비교를 해보면 근로소득에 비하여 수 업료 지출이 어느 쪽이 부담이 더 많을까?



2018년도 국세청 자료에 의하면 출산율이 85%에 육박하는 20~30대의 소득은 40~50대의 소득에 비해 눈에 띠게 낮은 것을 볼 수 있다. 특히 사회초년생인 학부모에게는 유치원비가 부담이될 수밖에 없다. 사회에 진입하는 예비부모들에게는 이 모든 것이 부담이어서 자녀 갖기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 현실이다.

2. 학교 교육 기회의 평등성

우리나라 유치원 취원율은 2019년 48.7%, 2020년 49%(통계청, 2020년)로 50%를 밑돌고 있다. 우리나라 학부모들이 유아교육에 대한 인식이 없어서 취원율이 50%를 밑돌지는 않을 것이다. 교육부의 자료를 보면, 2020년에는 전체 유치원 대비 국공립유치원 입학가능비율이 39%가 됐음에도 실제로는 29.8%만 취원한 것이다.

이는 계속 공립유치원을 늘려가는 것만이 유치원 취원율을 높이는 전략이 되지 못함을 입증하고 있다. 오히려 유아의 70%가 취원한 사립유치원 유아들에게 무상교육의 기회를 준다면 학부모 부담은 크게 감소되고 경제적 안정으로 인해 출산율을 높이는데 크게 영향을 줄 것이라 믿는다.

유치원 교육비 부담으로 인해 출산을 망설이거나 유치원 취원을 포기하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현실이다.

앞서 연령별 소득수준을 살펴보았듯이 고등학교 무상교육에 앞서 유치원 무상교육이 먼저 이뤄 졌어야 함이 더 절실했던 이유이다.

사회 초년생인 젊은 부부에게 출산을 선택하도록 하고 자녀들의 유치원 교육비 부담을 줄이는 등 모든 학교 교육기회의 평등성을 이루기 위해서는 유아 무상교육이 꼭 필요하다.

유아 무상교육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 동력이다.

3. 표준교육비의 산정

유아 무상교육을 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표준교육비다.

서울 같은 대도시와 지방의 소도시는 필요한 재정이 좀 다르기 때문에 전국 사립유치원의 표준 교육비를 산정하여 무상교육비용으로 계획됨이 마땅하다.

표준교육비보다 높은 유치원은 학부모 부담금으로 충당하고 학부모 부담금이 발생하지 않는 사립의 경우라면 공·사립 출발선의 격차를 줄일 수 있다.

아래 표는 한사협에서 교육통계서비스 자료를 토대로 계산한 유아무상교육비 내용이다.

예시1) 사립유치원 3, 4, 5세 유아무상교육 지원 시 예산 추정액 (2020년 교육부계산 평균교육비 50만원 추정) - 누리과정비 포함

그 전 연령 무상교육을 위한 예산 추정액 (단위 : 천원)					
구분	2022년 시행	2023년 시행	2024년 시행		
전 연령 무상교육	715,951,970	610,782,418	522,696,233		

 [※] 무상교육비 계산식 = (202○년도 전연령 유아수 ○○○,○○명 × 전국평균 유아교육비 50만원 × 12월)
 - (전연령 유아수 ○○○,○○명 × 지원급 33만원(누리26+방과후7) × 12월)

예시2) 사립유치원 3, 4, 5세 단계별 유아무상교육 지원 시 예산 추정액

	무상교육을 위한 연령별 단계별 예산 추정액 (단위 : 천원)					
구분	2022년		2023년		2024년	
	유아 수	무상교육비	유아 수	무상교육비	유아 수	무상교육비
만 5세	① 130,701	② 266,630,801	5세 무상교육			
만 4세	-		99,113	202,191,228	4세 무상교육	
만 3세					77,428	157,953,390

[%] ① 유아 수 계산식 = 각 연도 취원 대상 출생아 수 \times 유치원 취원율 \times 사립유치원 취원율

(각 연도 해당 연령 유아수 × 지원금 33만원(누리26+방과후7) × 12월)

4. 사립유치원 미래에 대한 우려 - 퇴로방안 마련 절실

1) 유아무상교육을 2026년까지 미룰 이유가 없다.

'작아지는 대한민국을 피할 순 없습니다. 하지만 덜 작아지도록 대비할 수는 있습니다. (cbs 캠페인)'

저출산에 따른 사회전반에 대한 걱정과 우려를 관망만 해서는 안된다. 미래에 국가적 큰 재앙이될 수 있는 상황에서 지금이라도 모든 정책에 우선해서 생애 첫 교육인 유아교육을 무상으로 하여출산율 제고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앞에서도 살펴봤듯이 2022년부터 평균교육비 정도로지원을 늘려가며 무상교육을 준비해가야 한다.

2) 현 유아교육정책에 대한 우려

국가는 사립유치원을 국공립유치원과의 공생관계가 아닌 경쟁대상으로 설정하여 자연적 감소가 아닌 인위적 도태를 추진하고 있다. 저출산에 따른 사립유치원의 폐원이 이미 급격하게 시작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유연한 퇴로 정책을 고민하기보다는 방관하고 있다.

앞의 발제 원고에서처럼 2026년 이후 공립유치원 취원율을 80%로 늘리고 의무 무상교육을 한다면 20%는 사립유치원이 담당하게 될 것이다. 2021년 3,700여개의 사립유치원 중 2026년 이후에는 700~800개의 사립유치원이 남게 된다. 지금의 유아교육 정책은 2026년 이후에는 사립유치원 3,000여 곳이 폐원하게 된다는 말이 된다. 이 정책안에는 폐원되는 3,000여 사립유치원에 대한 정책은 찾아볼 수 없다.

[※] ② 무상교육비 계산식 = 각 연도 해당 연령 유아수 × 전국평균 유아교육비 50만원 × 12월) -

또한 사립유치원의 법인화는 유아3법에서 '유치원 하나만을 가지고 있는 학교법인의 설립자는 원장이 될 수 없다'는 법이 제정되어 저출산으로 인한 원아수 감소로 경영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사립유치원은 새로운 원장임용 및 수억 원에 달하는 법인 부담금을 들여서까지 법인화를 한다는 것은 현실 불가능한 일이다. 이렇게 사립유치원의 사정이 고려되지 않은 정책은 사립유치원 입장에서 매우 섭섭한 일이다.

3) 초등학교 유휴교실 충당에 대한 의문점

초등학교의 유휴교실이 늘면 그 교실은 초등학생들을 위하여 활용해야 한다. 초등학교 학급당 학생 수 조정 및 늘어나는 방과후 프로그램 활용 등 돌봄 프로그램을 우선 고려하는 것이 먼저이다. 저출산 시대에 줄어든 유아들을 위해 이미 유아에게 최적으로 지어진 사립유치원의 유휴교실이 있는데도 유치원이 아닌 초등학교 유휴 교실이라니, 유아들을 위한 생각이라 보기는 힘들다.

4) 무상교육을 지나 의무교육에 사립은 없다.

공립유치원 80% 의무교육으로 가는 길에, 반대로 사립유치원은 현재 80% 가 유아교육을 포기해야 한다. 자의든 타의든 그럴 수밖에 없다고 단정하기 전에 사립유치원의 미래에 대해서는 어느누구도 말하지 않는다.

사립의 퇴로를 법과 규제로 제한하는 것은 오히려 공립 확대 정책에 장애가 되는 것 아닌가. 120여 년간 유아교육에 헌신해 온 사립유치원이 자연스럽게 퇴장을 할 수 있도록 각종 규제와 제약을 풀어 달라는 사립의 목소리를 더 이상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 용도변경 등 사립유치원 폐원에 대한 정책이 테이블에 안건으로 올려 지기를 바란다.

앞으로 없어지게 되는 3,000여 사립유치원에 대한 국가의 최소한의 배려라도 기대해 본다.

5. 결어

미래 유아교육에 대한 비전을 제시해야 할 토론회에서 사립유치원은 오히려 유아들과 미래를 함께 할 수 없다는 암담함을 떨칠 수가 없다.

유아교육을 위한 국가 지원을 사립유치원의 비리로 호도해온 그 목소리를 사립유치원 스스로 극복하기 어렵다는 것을 절실히 느낀다. 민간의 영역과 공공의 영역이 함께 해도 벅찬 일인데 오히려 급격히 줄어드는 사립유치원의 미래를 생각하니 씁쓸한 생각이 든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차치하더라도

유아 무상교육은 반드시, 서둘러 실현되어야 한다.

유아 무상교육의 시기를 앞당겨 새로 태어난 모든 유아들이 유아학교에서 평등하게 출발선을 같이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평생 유아교육에 종사해 온 우리가 함께 바라는 일이 아닐까 싶다.

장애유아의 의무교육이란

이혜연 1 전국 장애영유아부모회 고문

2021년 9월.

대한민국은 코로나 시국임에도 20대 대선을 앞두고 들썩이고 있습니다.

각 정당의 경선후보들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지겠다며 유아교육부터 성인의 평생교육까지 전 연령의 교육정책을 그럴듯한 제목으로 정하여 유권자들의 관심을 끌려고 합니다.

다양한 포지션을 가진 전문가 집단들이 그들만의 논리로 후보들의 정책공약을 연구하고 내어놓고 있는 반면 오히려 교육의 주체인 유아, 아동, 청소년의 교육정책 참여는 부재하며 현장의 소리는 도외시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육아정책연구소가 주최하는 '대한민국 미래 유아교육·보육 체제개편을 위한 연속 토론회'는 교육의 주체들이 참여하고 현장의 소리가 가감없이 전달되는 아주 좋은 기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관하여 준비하고 진행하신 주최, 주관, 연대 단체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며 발제에 대한 의견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생애 초기 교육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모든 유아에게 양질의 교육을 받을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는 발제자의 의견에 적극 공감하는 바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6조 '모든 국민은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

헌법에는 이미 모든 국민이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균등하게란 고르고 가지런하여 차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즉, 누구도 배제되지 않고 동등하게 교육의 권리를 누리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유아교육이 기관이나 소속부처에 따라 다르게 지원된다는 것은 이미 균등이 아닌 불균등즉, 교육적 불평등이 자행되고 있다고 보아야 하며 이는 헌법정신에도 크게 위배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 교육 불균등의 대표적인 예로 장애유아의 의무교육 현실을 논하고 싶습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조(의무교육 등)

①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하여는「교육기본법」제8조에도 불구하고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 과정의 교육은 의무교육으로 하고, 제24조에 따른 전공과와 만 3세미만의 장애영 아교육은 무상으로 하다.

② 만 3세부터 만 17세까지의 특수교육대상자는 제1항에 따른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인지자극과 적용, 사회화로의 확장까지 전인적 성장이 이루어지는 유아교육의 절대적 중요성은 여기 계신 누구도 이견이 없으실 것입니다. 만 3세부터의 교육은 유아가 성장하는 힘을 독려하고, 참되고 가치있는 삶을 살 수 있게 자립을 키울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기에 더욱 중요합니다. 특히 장애유아에게 있어서 교육은 생존을 위한 체득의 시간이기에 더욱 골든타임과 같은 만3세부터 의무교육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의미에서 발제자는 <u>장애영유아 의무교육이 가장 절실한 포용적 지원체계와 지속적 구</u>축이 필요한 곳이라고 표현했다고 봅니다.

2019년 특수교육연차보고서, 보육통계에 따르면

유치원 재원 장애 영유아는 5,989명, 어린이집 재원 장애 영유아는 12,116명이라고 합니다. 2021년 현재도 두배 이상의 장애유아가 어린이집에 있으며 이 중 일반 학급, 일반 어린이집에 다니는 장애유아(16%)는 아무런 특수교육의 지원도 없이 기관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유치원이 없는 거주지역 특성과 종일돌봄이 필요한 취약계층, 맞벌이 가정, 계속 증설함에도 장애유아수에 턱없이 부족한 특수유치원수 등 많은 원인이 존재하는 한 이 차이는 앞으로도 여전할 것입니다.

교육부는 교육적 책임을 다해야 할 대상이 이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어린이집은 소속기관이 아니라는 이유를 들어 대상자에게 마땅히 지원해야 할 특수교사 미배치, 교육교구의 지원부재, 이동권 미보장 등의 차별을 행하며 그들의 책임을 도외시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조(의무교육 등)

③ 제1항에 따른 의무교육 및 무상교육에 드는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이미 법으로 의무교육 대상자는 소속기관에 상관없이 국가의 전적인 비용부담이 전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국가는 의무교육의 본질인 공공의 책임을 등한시하고, 그것을 실현해야 하는 교육부는 기관선택권을 당사자에게 주는 양 당사자와 부모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국공립, 사립, 어린이집, 유치원, 보육, 교육

이 모든 단어들은 의무교육의 주체인 유아의 선택권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행정지원체계 분류에 불과합니다. 오히려 차별이 전제된 분류지원으로 유아는 교육의 권리를 차별당하고, 부모는 교육지원의 차원이 다름에 어리둥절하며 불공정한 상황에서 선택까지 책임져야 하는 잘못된 제도와 지원체계에 분노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파행적인 의무교육이 아닌 균등한 의무교육 실현이 되도록 이제는 바로 잡아야 합니다.

부모가 원하는 미래 장애유아교육은 '대상자 중심의 의무교육지원'입니다. 지금처럼 명목상 존재만 하는 의무교육이 아닌! 기관별 지원격차나 대상자 소외교육이 아닌! 대상자 중심의 의무교육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행정체계부터 변해야 합니다.

<u>의무교육의 지원범위 밖에 있는 어린이집과 사립유치원을 통합된 체제개편으로</u> 바꾸고 소속의 소외감이 없도록 모든 명칭을 교육에 맞게 '유아학교'로 통일하고 <u>교육과 보육의 교사양성과정을 학제개편을 통해서 보다 전문화</u>하여 유아교육이 생애 최초교육의 본분을 다하여 대한민국의 미래인 유아들이 보호되도록 해야 합니다.

통합된 체제개편을 통해서 의무교육 대상인 장애유아에 대한 교육권 보장과 재정 지원 등이 이루어 진다면 국가는 공정한 공공의 책임을 다하는 것이고 교육부는 균등한 교육을 실현하게 될 것입니다. (끝)

MEMO

MEMO

MEMO

MEMO